

석사학위논문

# 북한 핵문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염규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구형희

## 북한 핵문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ountermeasures  
for North Korea's nuclear issue



2011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염규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구형희

## 북한 핵문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ountermeasures  
for North Korea's nuclear issue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염규현

염규현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북한 핵문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염 규 현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핵 보유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근 반세기가 넘게 핵무기 개발에 집착해 왔고, 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핵은 단순한 협상용이 아닌 체제유지 차원에서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과거 북한은 핵 카드를 이용해 주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뒤 위기고조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행위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발악하는 근본적인 속셈은 국제사회로 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인받아 미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해 국제적 지원을 받아 보겠다는 저의와 더불어 강성대국을 실현하고 3대 세습체제를 안정적으로 굳히기 위한 속셈이 깔려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조치와 시장억제 실패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3대 세습체제 구축이 순조롭지 못하여 혼란 국면을 맞이한다면 체제 위기라는 최악의 위험 국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예측할 수 없지만 건강설이 나돌았던 김정일이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망이 임박하거나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된 상황 하에서 채스민 혁명이라는 중동 바람과 다변화하는 국제정세 변화의 파급효과로 급변사태라는 변화의 소

용돌이에 휘말려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체제 위기상황이 도래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핵을 이용하여 위기를 타개하려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북한이 처한 현실과 변함없는 대남 강경기조로 볼 때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 이해 관계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첫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6자 회담이나 남북한이 직접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둘째,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조로 북한의 협상전략을 분석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에 대해서 압력만 가한다면 반발을 유발하여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협력에 대한 압력과 협력에 대한 보상을 연계하여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협력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악의 북한 핵 시나리오인 핵사용에 대비하여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동맹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과는 북한 핵 및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한 군사협력 구축이 필요하며, 일·중·러시아 등과도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핵문제가 가지는 엄중함을 이용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회생을 돕기 위한 포용 안을 제시하여 포괄적인 타협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북핵문제, 경제난, 3대세습

# 목 차

|                                   |    |
|-----------------------------------|----|
| 제 1 장 서 론 .....                   | 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 1  |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3  |
| 제 2 장 북한 핵의 일반론적 고찰 .....         | 5  |
| 제 1 절 북한 핵 개발의 역사적 배경 .....       | 5  |
| 1.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된 배경 .....      | 5  |
| 2.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 .....           | 7  |
| 제 2 절 핵 개발을 통한 위기고조 행위 .....      | 15 |
| 1. 1차 북한 핵 위기 .....               | 15 |
| 2. 2차 북한 핵 위기 .....               | 21 |
| 3. 장거리 로켓 발사 .....                | 24 |
| 4. 핵 실험 .....                     | 26 |
| 제 3 절 북한의 대내외 환경 .....            | 28 |
| 1. 대내외 정세 .....                   | 28 |
| 2.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              | 31 |
| 3. 군사 위협 .....                    | 40 |
| 제 3 장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급변사태 가능성 ..... | 46 |
| 제 1 절 북한의 핵 개발 능력 .....           | 46 |
| 1. 핵 개발 과정 .....                  | 46 |

|                                     |    |
|-------------------------------------|----|
| 2. 핵 시설 현황 .....                    | 48 |
| 3. 탄도미사일 위협 .....                   | 49 |
| 4. 핵보유 능력 .....                     | 52 |
| 5.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평가 .....             | 56 |
| <br>제 2 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 .....      | 57 |
| 1. 미국의 입장 .....                     | 57 |
| 2. 중국의 입장 .....                     | 58 |
| 3.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 이유 .....          | 59 |
| 4.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      | 62 |
| 5.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의 관계 .....         | 63 |
| <br>제 3 절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        | 64 |
| 1. 급변사태 논의의 배경 .....                | 64 |
| 2. 급변사태 가능성의 부정적 의견 .....           | 65 |
| 3. 북한 내부분제의 표출 .....                | 67 |
| 4.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고립 심화 .....         | 72 |
| 5.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우리의 입장 .....       | 73 |
| <br>제 4 장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관리방안 ..... | 74 |
| <br>제 1 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   | 74 |
| 1.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             | 74 |
| 2. 북한의 입장 .....                     | 76 |
| 3. 북한의 핵 협상 전략 .....                | 79 |
| 4. 미국의 입장 .....                     | 81 |
| <br>제 2 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 82 |
| 1. 6자 회담의 배경 .....                  | 82 |



|                                     |     |
|-------------------------------------|-----|
| 2. 6자 회담의 진행과정 .....                | 84  |
| 3. 현재까지의 6자 회담에 대한 평가 .....         | 90  |
| 4. 주요 참여국의 명분과 역할 .....             | 91  |
| <br>제 3 절 우리 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 | 94  |
| 1. 현 정부의 대북정책 .....                 | 94  |
| 2. 3축 체제의 구축 .....                  | 96  |
| 3. 경수로 제공 .....                     | 97  |
| 4.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               | 98  |
| 5. 한·미·일 핵자문회의 .....                | 100 |
| 6. 핵검증체계의 구축 .....                  | 103 |
| <br>제 4 절 미사일 방어체계와 핵우산 지원 .....    | 104 |
| 1. 북한의 핵위협과 우리의 취약성 .....           | 104 |
| 2. 미사일 방어의 개념과 발전경과 .....           | 105 |
| 3. 미사일 방어의 형태 .....                 | 106 |
| 4.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추진방향 .....          | 109 |
| 5. 동맹국의 핵우산 지원 .....                | 112 |
| <br>제 5 장 결 론 .....                 | 116 |
| <br>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 121 |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 122 |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        | 123 |
| <br>【참고문헌】 .....                    | 124 |
| <br>ABSTRACT .....                  | 129 |

## 【 표 목 차 】

|         |                                      |    |
|---------|--------------------------------------|----|
| [표 2-1] | 1990년대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 10 |
| [표 2-2] | 북한 군사 지휘기구도 .....                    | 40 |
| [표 2-3] | 북한 지상군의 주요 장비 현황 .....               | 42 |
| [표 2-4] | 북한 해군의 함정 현황 .....                   | 42 |
| [표 2-5] | 북한 공군의 항공기 현황 .....                  | 43 |
| [표 2-6] | 북한 예비전력 현황 .....                     | 44 |
| [표 2-7] | 북한의 미사일 종류별 현황 .....                 | 45 |
| [표 3-1] | 북한의 핵시설 현황 .....                     | 48 |
| [표 3-2] | 북한의 미사일 제원 .....                     | 51 |
| [표 3-3] | 핵무기 특성 및 사용실적 .....                  | 57 |
| [표 3-4] |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 발언 .....           | 60 |
| [표 3-5] | 북한의 핵보유 관련 발언 .....                  | 61 |
| [표 4-1] | 비핵 · 개방 · 3000구상 실현 5대 중점 프로젝트 ..... | 95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재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북한의 핵개발이다. 1990년대 초 북한의 핵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남북협상, 북·미 대화, 6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포기시키려 시도하였지만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의 말만 믿고 막대한 정치·경제적 보상을 했고 지금도 협상에 의한 핵 폐기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아직도 북한의 핵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1, 2차 핵 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핵개발을 추진해왔고 핵을 운반하기 위한 장거리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에 대해 억지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를 견제해야 하는 현재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저비용 적이며 고효율적인 협상카드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핵개발은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최근 중동 발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독재정권이나 장기 집권중인 권력 또는 공산권 국가들에서 체제유지의 위기국면을 초래하는 사건과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묵시할 수 없는 반드시 ‘포기’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불안정한 집단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수류탄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게다가 북한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과 더불어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급변사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북핵 문제를 예측 불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이 급변사태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한반도는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으로 인하여 장기간 철권통치를 하던 이집트가 무너졌고, 최근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 원수가 반군에 의해 제거되는 등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은 인접 독재국가에서도 정권퇴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제재조치로 고립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건강악화로 인해 후계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하는 등 복잡한 갈등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기본인 먹고, 입는 것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통제만 강화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도 이집트나 리비아처럼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북한 주민들도 체제전복을 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과 재스민 혁명 파급효과는 북한을 급변사태라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록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이 경제대국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화폐개혁과 경제개혁의 실패에서 본 것처럼 현재로서는 지금의 경제난을 조기에 타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면서 원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 상 원조는 기대하기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이므로 급격한 정책변화를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북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선행 연구 자료를 기초로 북한 핵능력을 평가한 후,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관계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고,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측해 봄으로써 최악의 시나리오인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북한의 핵 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현재 북한의 핵문제는 분명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임은 두말 할 나위없는 사실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6자회담은 북한의 무성 의한 태도로 목적달성에 실패한 채 2008년 12월 6차 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용도 폐기된 지 벌써 3년째가 되고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지구상 전무후무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인 고립 탈피와 대내적으로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대외적 군사주의 노선을 견지한 가운데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면서 강온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과 외교적 제재 모면을 위한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후계자로 세습체제를 구축하더라도 주체사상 혹은 김일성 유일사상을 계속 통치이념으로 고수·강화하려 할 것이고, 공산독재·폐쇄체제와 공산화 통일노선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현 북한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방·개혁은 계속 거부할 것이며, 군사력 증강정책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던 지난 2010년 9월 29일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주변을 향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라면서 핵 억지력 강화를 계속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김정은이 독자 통치능력을 확보하기 이전에 김정일이 사망 할 경우와 대내·외적인 상황에 의한 위기상황 발생 시

핵을 이용하여 돌파구로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된 배경과 핵능력에 대한 판단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능력을 이해하고,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후계자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 구축이라는 연착륙 과정에서 북한의 대내·외적인 현실을 파악하여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 셋째,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이해 관계국의 입장 등을 포함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북한 핵문제 관련 각종 연구논문, 간행물, 학술지 등의 학문적 영역을 연구하였고, 선행연구는 북핵문제와 북한정세 관련 연구논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금번 연구에서는 비공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기존에 선행 연구하고 검증된 자료 위주로 정리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구성은 전체 5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기술한다.

제2장은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능력 부분으로 북한 핵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평가해 보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과 위기고조 행위 및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NTP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3장은 북한의 정세와 급변사태 가능성 부분으로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 및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등을 설명한다.

제4장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부분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6자회담 이해 관계국의 노력을 조명하고, 우리정부의 핵문제 해결방안과 미사일 방어체계 및 핵우산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과 향후 연구할 방향 등을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북한 핵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제 2 장 북한 핵의 일반론적 고찰

### 제 1 절 북한 핵개발의 역사적 배경

#### 1.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하게 된 배경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하고자 했던 배경과 비슷하다. 미국은 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 1호 인공 위성발사에 성공하자 1958년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들여왔고, 서독 등 소련 주변 동맹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한 미군의 전술핵에 관해 김일성은 1961년이 되어서야 인지하는 등 그 당시만 해도 핵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소간 긴장상황에서 소련이 쿠바에 설치했던 공격용 무기가 미국에게 밀려 철수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소련과의 군사동맹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1962년 11월에 북한의 군사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군사원조를 요청하였으나, 소련으로부터 냉담을 받는 서러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함한 자주국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sup>1)</sup>이다.

북한은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의 이후 군사비를 대폭 증가시켰고 1970년 제5차 당 대회 이후부터 핵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김일성은 1972년부터 핵개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197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가장 많다.<sup>2)</sup>

1) 냉전시대부터 유래한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세력균형을 확보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종결시키고, 북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적 안보를 확보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군사적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는 필연적으로 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전쟁을 쉽게 시작할 수도 없었다는 소위 공포의 균형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황지환, 『선군정치와 북한 군사부문의 변환전략』, 서울: 국제관계연구원, 2009, p.108.)

2) 박계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방안”, 『군사세계 통권 170호』, 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09, p.87.

북한의 지도부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유일체제를 유지하고, 정치·군사적인 주체성을 보다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핵이 강력한 에너지와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은 김일성의 4대 군사노선과 대남 적화통일 전략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체제안정과 보전, 생존과 번영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추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대남 군사전략인 전후방 동시공격을 이용한 속전속결 전략을 수행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하고, 미국의 한반도 증원 전력과 일본의 후방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결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의 드브나 연구소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핵기술을 습득하였으며, 현재 약 3천명 이상의 전문 인력과 200여명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에 평북 영변에 원자력 연구 단지를 조성하고, 1965년에 소련으로부터 당시로선 최첨단 장치를 도입해 가동하면서 원자력에 관한 기반기술을 쌓았다.<sup>3)</sup>

이렇게 축적된 기술로 핵개발을 추진해 오던 북한에 대해 IAEA는 북한이 1992년 5월 4일 제출한 최초보고서를 기초로 핵사찰을 개시하였다. 핵사찰 과정에서 IAEA는 북한이 3년(1989~1991년)간 수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계량결과가 나와 북한이 밝힌 플루토늄 생산량과 시기가 불일치하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북한은 1회(1990년)에 단지 90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갈등국면이 조성되었다.

이어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출한 뒤 폐기한 처리장으로 추정되는 미신고 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사찰 요구를 받게 되자, NPT 탈퇴로 대응해 핵사찰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1994년 10월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따라 플루토늄을 활용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3) 북한 핵개발의 대부로 알려진 경원하 박사는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월남한 후 1956년에 정착한 뒤 9년간 현 강원농대에서 일반수학을 가르치다가 1965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에 유학 갔었다. 경원하 박사는 브라질, 캐나다를 거쳐 1972년 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전 미국 맥길대에서 “구형가스 폭발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 내용은 핵무기 제조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고품 장치 개발에 적용 가능한 분야로써 북한 핵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주요 부품인 특수 알루미늄을 수입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2003년 10월 3일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은 방북 중이던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했다.

북한은 2003년 4월 18일에는 “8천개 폐연료봉 재처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sup>4)</sup> 4월 30일부터 2일간 영변의 방사 화학 실험실에서 재처리를 하고 있다는 징후인 증거가 포착되었다.

## 2.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

### 1) 체제 안정유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당국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김정일 후계체제로 이어진 체제안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일정기간은 유혼정치를 통해 아버지의 후광을 자신의 후계체제를 굳히는데 활용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선군정치’를 내세워 자신만의 체제를 가시화하는데 주력하였다.

1990년대 초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중·소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고, 특히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은 최악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수십만대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중국으로 빠져나왔고, 이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로 탈북 하는 사태를 북한 당국으로서는 간과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 이반현상과 보이지 않는 내부 불만요인들은 곧 김정일 체제유지에 큰 위협요소로 인식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4) 북한의 HEU 생산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HEU를 사용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1kg정도가 필요한데, 처음 1개를 만들 경우에는 가공손실 등을 고려해서 최소 HEU 25kg이 필요하다. 북한이 보유한 원심분리기는 파키스탄에서 개발한 P-1과 P-2 모델로 추정된다. P-1은 1대당 연 2kg-SWU, P-2는 연 5kg-SWU 정도의 농축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 5000kg-SWU의 농축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P-1 2,500대, P-2 1,000대의 설비가 필요하다. 북한이 이러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균 8~10년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HEU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5~7년이 필요하다. 여기에 북한의 기반기술, 자금,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한국동북아학회 제15권 제2호』, 서울 : 한국동북아논총, 2010, pp.148~149.)

북한 당국으로서는 필요한 시점이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제안정을 위한 여러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민족주의와 자유노선을 표방하는 일방 1980년대 초부터 주체사상을 내세워 주민결속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북한이 안고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지원에 한계를 느낀 북한은 서구권과의 정치적·경제적 교역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관계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미국과의 접근이 어려워지자 핵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이다.

핵 카드를 통해 경제를 희생시키고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를 획책함으로써 김정일의 위대함을 인민들에게 부각시켜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 유일지배체제 외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한 기득권세력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하다.

황장엽 전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는 2009년 4월 27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심계층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김정일 체제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살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끼자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핵 카드를 활용하여 극단의 협상게임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자기들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sup>5)</sup> 미국으로부터 불가침협약 등 체제보존을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김정일의 이러한 체제유지 불안은 군을 우대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 핵 카드를 꺼내들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핵 협상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경우 김정일은 국민적 영웅

5) 2009년 1월 13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 전 조선의 비핵화가 철저히 검증 가능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 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 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 되거나 통과하지 않는지 사찰을 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으로 신비스러운 통치자로 위치를 굳힐 수 있을 것이며,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서도 안정적 체제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 2) 침체된 경제회생

1990년대 초부터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교역대상국이 상실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원조 급감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면서 김정일의 통치체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권 국가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한 결과 미국과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1990년 초부터 우리나라의 북방외교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동구 공산권 국가는 물론 1990년 9월 30일에는 소련과도 국교를 수립하자 이에 영향을 받은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등 대남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현 정부 이전에 두 차례나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바 있다.

일본과도 8차례에 걸친 고이즈미 총리와의 접촉 등 활발한 진전이 있었으나, 2001년 9.11테러 사건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핵문제를 부각시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미국과의 핵협상을 유도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얻고자 하였다.<sup>6)</sup>

1970년대까지 아시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국가로 평가되던 북한의 경제상황은 1970년대 이후 점차 하향 추세가 되었으며, 1990~1998년 기간 동안에는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기아 직전 상태의 식량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활동 위축, 생필품 난, 생산능력 저하와 외화부족에 따른 대외무역 정체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sup>7)</sup>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6)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대외 의존성 심화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던 무역이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09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34.1억 달러로 전년보다 10.6% 감소하였다.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6.0%와 12.5%가 감소한 10.6억 달러와 23.5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12.9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북한은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대중수출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은 찾기 어렵고 장기적인 수출증대를 모색하기 보다는 외화 획득을 위해 단기적으로 구득 가능한 지하자원과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조봉현, “북한의 경제상황과 사회변화”,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pp.25~26.)

하여 작성한 1990년대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는 [표 2-1]과 같다.

[표 2-1] 1990년대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 분         | 단 위    | 1990년  | 1998년 | 1999년 |
|-------------|--------|--------|-------|-------|
| 인구          | 만 명    | 2,022  | 2,194 | 2,208 |
| 경제활동인구      | 만 명    | 1,485  | 1,619 | 1,638 |
| 농가인구        | 만 명    | 764    | 801   | 810   |
| 식량작물생산량     | 만M/T   | 402    | 389   | 422   |
| 명목국민총소득     | 억 달러   | 231    | 126   | 158   |
| 1인당 국민소득    | 달러     | 1,142  | 573   | 714   |
| 경제성장률       | %      | -3.7   | -1.1  | 6.2   |
| 농림 어업       | %      | -10.2  | 4.1   | 9.1   |
| 광공업         | %      | -2.9   | -3.9  | 9.9   |
| 제조업         | %      | -1.5   | -3.1  | ·     |
| 전기, 가스, 수도  | %      | -2.2   | -9.2  | ·     |
| 무역총액        | 억 달러   | 47.2   | 14.4  | 14.8  |
| 수출          | 억 달러   | 19.6   | 5.6   | 5.1   |
| 수입          | 억 달러   | 27.6   | 8.8   | 9.6   |
| 무역의존도       | %      | 20.4   | 11.4  | 9.4   |
| 총외채         | 억 달러   | 78.6   | 121   | 122.9 |
| 총외채/GNI     | %      | 34.0   | 96.0  | 77.8  |
| 에너지 총 소비량   | 백만 TOE | 23.9   | 14.0  | 15.0  |
| 1인당 에너지 소비량 | TOE    | 1.18   | 0.64  | 0.67  |
| 발전조비용량      | 만 kw   | 714    | 739   | 739   |
| 발전량         | 억 KWH  | 277    | 170   | 186   |
| 원유도입량       | 천 배럴   | 18,472 | 3,694 | 2,323 |
| 정유능력        | 천 BPSD | 70     | 70    | 70    |

\* 출처 : 통계청, 2000년

- 7) 북한 경제는 어느 한해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기간에 걸친 연속적인 침체 위기단계에 진입하였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90년대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009년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화폐개혁에 따른 후유증과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2010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더 확대되었다. 현재 추세라면 1990~1998년 충격의 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전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이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경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1992년도의 -7%대에 접근할 가능성이 보인다. (조봉현, 전계서, p.23.)

김정일은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햇볕정책을 고수하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눈길을 돌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는 강경자세에서 대화재개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는데 북한이 강경자세에서 다시 대화재개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무시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전략에 위기를 느끼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핵개발을 내세워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종목표는 서방 권과 교역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유일체제를 보존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회생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경제개혁정책을 단행하였다. 이 조치는 임금 및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가격설정방식의 개편, 국가계획수립 권한의 부분적 위임, 생산부문의 자율성 일부 부여, 생산자재 시장의 개설, 배급제의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하고도 획기적인 조치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바닥나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 못하고 물가가 대폭 상승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sup>8)</sup> 결국 북한은 경제개혁조치 등 자체 경제정책만으로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핵 카드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9)</sup>

8) 북한은 환율불안에도 상품수급 불균형 심화로 시장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또한 시장가격의 상승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돈 주들은 물건 사재기로 폭리를 노리면서 급 수요를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들은 급격한 가격변화를 관망하기 때문에 공급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거래 자체도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상품가격 결정의 핵심 기준이 쌀 가격인데 식량의 절대적 부족과 가격 불안정으로 식량가격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쌀 1kg에 1200원 수준이며, 화폐개혁 이후 물가사정은 훨씬 더 나빠졌다. (조봉현, “북한의 경제상황과 사회변화”,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pp.29~30.)

9) 이처럼 북한은 지금 대외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핵 카드 사용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금융제재, 대북지원 감소, 외자유치 불투명으로 대외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실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럽 및 아랍권 기업들의 북한 지하자원 건설, 유전개발 투자 계획은 더 이상 진척이 없고, 몽골 정부의 나진항 투자 계획도 완전 중단 되었다.

### 3) 서방국가와의 교역 확대

북한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서방 외교를 강화하기로 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였는바,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며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 외교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서방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자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며 미국과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이후 1990년대 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붕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국제적 고립탈피와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권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미국과는 1988년부터 1992년 사이 북경에서 28차례 참사관급 외교관이 접촉하였고, 1994년 10월에는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직접협상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과는 1991년부터 1992년 동안 8차례에 걸친 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1998년 3월 일본 자민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관계개선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1998년 8월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가 북·미 관계개선을 계기로 일본 정당대표단과 1999년 12월 평양에서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부터 북한은 전 방위 외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외교역량을 집중하였다.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으나 변화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제적 고립탈피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전 방위 외교가 불가피하였다. 그 결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우리정부의 대북화해정책과 더불어 북한이 실용주의적 외교정책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2000년 10월 북한의 정치국장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미대통령과 회담 후 ‘반테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하는 등



양국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표현하는 등 대북강경책을 표방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준비된 핵 카드를 이용하여 대미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다.

일본과는 2000년 수교회담을 재개하고 동년 9월 ‘일본인 처 고향방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여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및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다시 정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sup>10)</sup>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두 차례에 이어, 최근에는 2011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집권 이후 7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 선린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북한은 유럽 연합 국가들에 대해 뚜렷하게 전 방위 외교를 강화하여 2001년 1월부터 2003년간 15개의 유럽 연합 국가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수교관계에 있는 서구 선진국 중 상당수의 국가들은 북한의 테러 및 핵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4)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우리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sup>11)</sup>

북한의 최대 목표는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북·미간 적대관계가 반드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북한이 변함없이

10) 정원식 전 국무총리에 의하면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서 서울과 평양에서 북측대표단과 회담을 했을 때 느낀 점은 북한이 미국 등 서방 권 국가와 교역을 하기위해 우리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1992년 1월 평양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 서방 권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핵을 가지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1) 북한은 자국의 법에서도 핵무기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법(2000년) 제7조에는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된 정책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태욱,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위하여”, 『민주법학 제33호』, 서울: 관악사, 2007, p.235.)

원하고 있다. 2009년 10월 태국에서 개최된 제4회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 16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 북한은 여전히 최대 당면 목표로 미·북 수교에 의한 북한체제 안정만을 주장하였다.

핵무기는 국가들의 군사전략 자체의 변경을 가져올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외교적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sup>12)</sup> 북한은 그들의 생존과 권력 유지의 군사적 수단으로서 그리고 주권과 안전보호를 내세우면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 하려한다. 북한은 핵무장이 국제적 위상을 고양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면서 “자위를 위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sup>13)</sup> 임을 역설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자위권의 원칙에 부합되며,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이라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가 자국의 낡고 정제된 재래식 군사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 공격 및 선제공격을 저지시키는 유효한 수단이라 여기고 있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이라크를 대상으로 선제공격 하였듯이 북한을 대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 유엔 사찰 팀이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관련 사찰을 수차례 실시했으나 위배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의 승인 없이 주도적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한 선례는 미국의 다음 번 주 공격표적이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선제공격과 전술 핵무기 사용을 우려하여 핵 억제력 차원의 핵보유 타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치러진 현대 전쟁의 전례에서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1968), 아프간(1979) 침공과 미국의 그레나다(1983), 파나마(1989), 베트남(1965~73), 이라크(1991, 2003) 침공 등은 엄청난 핵과 가공할 만한 무기체계를 가진 강력한 군사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군사역량이 훨씬 약하고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

만약에 공격을 받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면 강대국이

12) 길병욱,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전략과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12권 4호』,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07, p.9.

13) 노동신문, 『천만번 정당한 자주권 행사』, 2009. 4. 29.



그들의 잣대에 따라 함부로 침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확고한 안보를 구축할 수 있다고 여긴다.

왈츠(Kenneth N. Waltz)의 상호 억지력과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에 논리적 토대를 두면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자 하며, 핵무기 보유를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정당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핵무기 제조기술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선제공격을 예방한다는 주장 하에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 제 2 절 북한의 핵문제 관련 위기관리

### 1. 1차 북한 핵 위기

#### 1) 북핵문제와 NPT

제1차 북한 핵 위기사태를 통하여 미·북 핵협상의 진통을 거치면서 ‘제네바 기본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70년 3월 5일 체결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통해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소위 5대 핵보유국(P-5) 이외 국가에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모든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목적 외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 제조를 금지하자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이 NPT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여 핵보유국이 되는 등 본 조약의 한계성이 있으나, 오늘날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도 소련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1985년 12월 12일 NPT에 가입한 바 있으나, 북한은 NPT에 가입한 이래 국제조약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sup>14)</sup>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기피하면서 핵개발을 추

14) NPT 제 2조는 ‘비핵국가는 핵무기를 제조 또는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과 제 3조에서는 ‘NPT에

진하였다. 결국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등 불리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NPT에 가입한지 무려 6년이 지난 1992년 1월 30일에야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IAEA의 임시사찰이 실시되었다.<sup>15)</sup>

북한의 핵문제는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에 의해 영변의 핵개발 문제가 알려지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 되었는데 북한은 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NPT에 가입한 북한이 18개월 내에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위협을 계속 증대시켰기 때문에 체결을 미루어 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에게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수, 북한에 대한 핵위협 중지, 법적인 안전보장 공약, 동시사찰 등을 요구했다.

## 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80년대 말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노태우 정부와 북한은 양측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이러한 남북대화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

---

가입한 비핵국가는 18개월 이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핵시설, 핵물질, 핵 활동에 대해 신고하고 사찰을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5) 1980년대 후반 북한의 적극적인 핵개발 의혹에는 IAEA의 신중치 못한 행동에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1960년대 소련이 공급한 소형 원자로에 대한 사찰에는 합의하였지만, 1985년 NPT에 가입 전까지는 NPT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다. 또 북한은 NPT 가입 후 IAEA의 핵안전협정 가입을 결정하고 18개월 내로 핵시설 사찰 목록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IAEA측의 실수가 발생하였다. IAEA는 북한이 NPT 가입 직후 북한의 전체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문(Type153)을 보내야 하나 개별 시설 사찰에 관한 협정문((Type66)을 보냈던 것이다. 이로 인해 IAEA가 다시 Type153을 보낸 것은 1987년 6월이었고, 그에 따라 북한이 요구한 1988년 12월까지 유예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이 1992년 IAEA와 핵사찰을 합의할 때까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기간에 소련 해체 등 북한의 핵개발을 불러일으킬 국제질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IAEA와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은 북한이 약 6년간 영변의 핵 시설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연구와 모종의 실험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본격화 되자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테두리 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하고 남북한 상호 핵사찰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였다.

1991년 1월 17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비핵국가들에게 적용된다.” 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대통령은 전 세계 지상 및 해상기지의 모든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철수를 발표하였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8일 일방적인 ‘비핵화선언’에 이어 12월 8일 한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단 1개도 없음을 확인하는 ‘핵무기 부재선언’을 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남북 간 핵협상이 1991년 12월 26일 개시되었고,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sup>16)</sup>에 합의하였으며, 1992년 1월 2일 정식 서명을 거쳐 2월 19일 발효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 간 상호사찰 규정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회의가 3월부터 개최되었다. 그러나 사찰의 범위, 빈도, 방식 등 여러 현안들을 둘러싸고 논쟁만 계속되다가 결국 아무런 합의도 없이 1993년 1월 말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 3) 1차 북한 핵 사태

1992년 1월 체결한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이 그해 4월에 발효됨에 따라 북한은 동년 5월 핵물질 및 시설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IAEA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IAEA는 북한의 최초보고서 내용을 현장 검증하기 위해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례 임시사찰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IAEA 사찰단은 임시 사찰과정에서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 내용과 ‘중대한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sup>17)</sup> 그러나 중대한 불

16)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①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금지, ②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 ③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금지, ④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한 대상에 대해 사찰 실시, ⑤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17) 북한의 최초보고서에는 영변의 5MW 연구용 원자로의 손상된 연료봉으로부터 단 1차례의 재처

일치 문제가 해명되지 않음에 따라, IAEA는 북한이 비밀리에 추출한 Pu의 구체적 시기와 정확한 양을 검증하기 위해 재처리 Pu의 폐기물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2개의 액체 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액체 폐기물’이란 재처리시설에서 화학적 방식으로 Pu를 농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서 여기에는 재처리 시기나 용량 등을 계측할 수 있는 방사능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2개 시설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들이 ‘군사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IAEA 사찰을 완강히 거부하였다.<sup>18)</sup>

이에 1993년 2월 25일 IAEA 이사회는 추가 정보의 확보를 위해 북한에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IAEA의 주권 침해와 불공정성을 명분으로 삼아 특별사찰을 거부하며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NPT 탈퇴라는 급박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국제사회는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남북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던 북핵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최우선 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NPT체제의 항구적 유지를 추진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NPT 탈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었다.

1993년 3월과 4월 IAEA 특별이사회가 개최되어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 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UN 안보리는 4월과 5월 북한에 대해 NPT 탈퇴를 재고하고 NPT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3개월 동안의 과정에서 북한은 IAEA 대신 미국과 직접협상을 요구하였다. 이는 냉전종식 이후 국제적 고립, 경제난 등으로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던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체

---

리를 통해 90g의 플루토늄(Pu)을 추출했다고 신고했는데, IAEA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채취한 샘플을 정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 3차례(1989, 1990, 1991년)에 걸쳐 10~14kg의 Pu를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이다

18) 북한은 IAEA 사찰이 개시되기 직전에 2개 시설물에 대해 은폐작업을 실시하였는데, 1개 장소는 전체를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많은 나무를 심었으며, 1개 장소는 흙으로 덮은 후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은폐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첩보위성은 그 은폐과정을 낱알이 감시하고 있었다.

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확보<sup>19)</sup> 하려는 계산된 전략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NPT 유지차원에서 북한의 직접협상 요구에 호응하였고,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이 6월 2~1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북·미간 협상결과 6월 11일 북한이 NPT 탈퇴를 유보하는 대신 미국은 무력 불사용, 공정한 핵 안전조치의 적용, 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등을 약속한 ‘북·미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다. 북핵문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NPT 탈퇴선언이 발효되기 하루 전에 NPT 탈퇴 효력을 정지하는데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훗날 북한이 ‘NPT 회원국도 아니고 비회원국도 아닌 특수지위’라는 명분으로 NPT상의 의무를 자위적으로 무시하는 고질적인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후 7월 14~1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과 IAEA간에 사찰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8월과 9월 IAEA와 북한 사이의 사찰방식에 대한 협의가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이어 9월과 10월 IAEA 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에서의 ‘안전조치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UN총회에서도 11월 1일 IAEA 사찰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으로 1994년 1월 초부터 IAEA와 북한 간에 6차례 협상이 재개되었고, 2월 15일 사찰방식에 대한 합의와 함께 북한은 IAEA가 요구하는 영변지역의 7개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에 따라 IAEA 사찰단이 1994년 3월 초 영변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중대한 불일치’를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처리시설(방사화확실험실)에 대한 사찰을 끝내 거부하였다.

결국 IAEA는 3월 15일 사찰단의 철수를 지시하는 한편,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규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런 와중

---

19)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극단적 행동을 보여 왔던 북한의 과거 행태, 경제난을 회복하기 위해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게 핵물질을 판매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에 북한은 3월 19일 개최된 제8차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남한이 북·미 회담을 파탄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 사항, 남북대화, IAEA와 북한 간의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 4)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와 북한 핵 동결이 이루어졌다.<sup>20)</sup> 북한은 1994년 6월 18일 카터-김일성 회담에서 제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완전한 핵투명성을 보장할 용의가 있으며, 특별사찰은 미국의 경수로 제공 약속 및 핵무기 불사용 보장 시 논의 가능하며, 미·북 대화가 계속되는 한 IAEA 사찰관 및 사찰장비 잔류를 허용하는 한편, 제3단계 고위급회담을 6월 22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8월 5일부터 제3단계 고위급회담이 재개되었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를 채택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기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카드를 활용한 미·북 간 직접대화, 미·북 관계개선, 안보우려 해소, 경수로 지원을 통한 에너지난 해결 등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미국도 북한의 NPT 탈퇴를 저지하고 북한의 현재 및 미래 핵 활동을 동결하여 1995년 NPT 무기한 연장 검토회의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NPT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제네바 기본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핵동결 및 경수로 제공과 함께 북·미 관계개선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2,000MW 경수로 제공을 위해 설립된 ‘한반도 에너지개발구’(KEDO)와 북한 간에 1995년 12월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20) 즉, 이러한 긴박한 위기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급반전 하였다.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방북하였던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클린턴 대통령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김일성이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온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영변의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할 것과, 협상은 북한 핵위험의 영구 제거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토록 하였다.



북한은 1996년 4월 IAEA 감시 하에 8천여 개의 사용 후 연료봉 봉인작업을 개시하였으며, 1997년 8월 함경남도 신포지역에 경수로 부지공사가 착공되었고, 2000년 2월부터 한국형 원자로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2002년 10월까지 약 40%의 공정을 보였다.

그러나 제네바 기본합의는 한국전쟁 이래 누적되어 온 상호 간의 불신 속에서 맺은 정치적 합의로서 그 이행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우선 경수로 건설의 목표시한을 2003년으로 설정하였으나, 각종 장애요소가 돌발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었다.

요컨대 6개월 내로 체결하기로 하였던 경수로 공급협정이 14개월 소요되었고, 북한에서 공사하기 위해 필요했던 통행·통신 등 각종 의정서를 협상하는데 수년을 허비하였다.

그리고 경수로 공사 착공에 앞서 항만, 도로, 전기, 근로자 숙소 등도 새로 건설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의 강릉 침투사건으로 인해 경수로 부지조사 작업이 수개월 중단되기도 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NPT잔류 및 IAEA의 안전조치협정 이행 합의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2002년 10월 제임스 케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중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농축(HEU)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함에 따라 제2차 북핵 위기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경수로 사업과 KEDO의 운명이 다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sup>21)</sup>

## 2. 2차 북한 핵 위기

제2차 북한 핵 위기사태 발생의 근원은 미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로 의 정권교체 당시부터 잉태되고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해 비판해 왔던 공화당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

21) 2차 북핵 사태 진전에 따라 2003년 11월 KEDO는 경수로사업 일시중단 결정에 이어 2006년 2월 경수로사업의 완전 종료를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6월 6일 부시 대통령은 재검토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과 협의할 사항은 핵동결에 관한 기본합의의 이행을 개선하는 문제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제한 및 미사일 수출금지, 재래식 군사력태세 등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인민을 돕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 행동에 의한 일괄타결을 요구했던 북한은 부시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무장해제 시키는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강력 반발하였다.

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Evil)으로 규정하였으며, 9월 보고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미국과 우방국에게 가장 위협스러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위협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공격 가능성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부시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이 강경한 색채로 변화되면서 북·미 간에도 ‘제네바 기본합의’와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제네바 기본합의’에 불만을 갖고 출범하였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IAEA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고 ‘제네바 기본합의’도 파기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특별사찰을 주장하자 북한은 그동안의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하였고, 북·미간 긴장으로 인해 ‘제네바 기본합의’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었으며 그것이 폭발하는 데는 얼마 가지 않았다.

2002년 10월 3~5일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 등 각종 협정들을 위반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보를 제시하자 북한 관리들이 이를 시인함에 따라 2차 북핵 사태가 발생하였다.<sup>22)</sup>

북한의 농축우라늄개발 프로그램은 1992년 남북 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으며,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2002년 10월 16일 북한의 농축 우

22) Kelly 차관보 방북 중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되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늄개발 프로그램은 ‘제네바 기본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북·미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나왔다. 2002년 11월 14일 미국의 NSC 및 KEDO 집행이사회는 12월분부터 중유제공의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11월 19일 개최된 IAEA 정기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의 신속한 이행과 농축우라늄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였다. 이 와중에 12월 10일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 ‘서산호’를 스페인이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IAEA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감시·봉인장비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그동안 동결되어 있던 영변 핵시설의 가동과 중단된 핵시설의 건설 재개를 선언하였다.

2002년 12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북한은 동결된 영변 핵시설 중 5MW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공장, 사용 후 연료봉 보관 수조 등 4개 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 작동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1월 27일에는 IAEA 사찰단원 추방 및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준비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고, 12월 29일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네바 합의’ 파기로 NPT 탈퇴 유보 조치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고 주장한 후 12월 31일 영변 핵 단지에 상주하던 IAEA 사찰단을 추방하였다.

2003년 1월 6일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의 핵시설 봉인·감시 장비 복원 및 사찰관 복귀 이행 등을 촉구하며 북핵문제를 UN안보리에 상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마침내 북한은 성명을 통해 NPT탈퇴를 선언하였다.<sup>23)</sup>

2003년 2월 12일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추가적 불이행 상태를 선언하고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에 대한 검증의 불가능성을 UN총회와 안보리에 보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23) 2003년 1월 1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993년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 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NPT 탈퇴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또한 NPT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3조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주장.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2003년 2월 26일 영변의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한편, 2003년 4월 18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가 이미 선포한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부터 핵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그리고 지난 3월초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게 중간통보를 해 둔 바대로 이제는 8천여 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이 마지막 단계까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선언하였다.

북한은 NPT 탈퇴선언과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 감행과 함께 2003년 2월 18일과 3월 5일 ‘정전협정’ 탈퇴, 2월 24일과 3월 10일 미사일 시험발사, 3월 2일 공해상에서의 미국 정찰기 요격 등 극한 상황조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정세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와 같이 과격으로 치닫는 사태악화에 대해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들 간에는 다자대화를 통한 접근법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4월 12일 북한이 대화형식에 대해 신축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4월 23~25일간 미국·북한·중국은 북경에서 3자회담 및 북·미간 비공식회동을 가짐으로써 첫 번째로 공식적인 다자대화가 개시되었다. 이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과 대결이 넘나드는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 3. 장거리 로켓발사

북한의 로켓발사는 장거리 발사능력 과시<sup>24)</sup>, 대량살상무기 운송수단 확보, 정치군사적 효과 및 내부 체제결속 강화와 함께 북·미간 직접 협상을 유도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고조시키려는 배경과 원인에 따라 추진되었다.

북한은 위기고조 행위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해 북·미간 양자협상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강경 기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이 대북문제

---

24) 북한의 로켓발사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데,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1단과 2단이 정상 작동함으로써 단 분리와 엔진제작, 추력조절, 자세제어 등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한 것을 보여줬으며, 2단과 3단의 개량을 통해 성능이 우수한 로켓을 제작할 수 있다. (장용훈, “북, 핵능력 제고 후 대미협상 새판시도 전략”, 『연합뉴스』, 2009. 4. 29.)

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고 무시정책을 취한데 따른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오히려 북·미 협상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방해한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은 유엔 상임이사국결의안 1718을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 추진에 단호한 자세를 취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였지만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원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 대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채택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결의안 1718과 의장성명을 토대로 대북제재를 단행했는데, 그 일환으로 유엔안보리는 핵미사일 개발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종합회사 등 세 기업을 선정해 제재하기로 결정하였다.<sup>25)</sup>

이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재무부는 3개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다. 이들 기업의 자산동결 액수는 3,17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6)</sup> 더군다나 이 조치에 따라 유엔회원국들은 이들 기업과 금융경제거래를 금지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제재조치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은 없으나 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6자 회담을 거부하였다. 또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핵시설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 방침과 추가 조치로 제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맞대응 했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단호한 자세를 취해왔다. 그렇다고 협상의 문을 닫아 놓은 것은 아니라 위협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기가 어렵겠지만 북한이 핵 회담을

2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그동안 제재 기업 수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1곳과 14곳씩 북한 기업 제재를 요구하였고, 6자회담 등을 감안해 대북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온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기업 지명에 반대했었다. 결국 타협안으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의 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김현준, “안보리, 대북제재 기업 3곳 선정”, 『연합뉴스』, 2009. 4. 25.)

26) 장용훈, “대북제재 북한기업 ‘제2경제위’ 소속”, 『연합뉴스』, 2009. 4. 25.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무시전략에서 대화와 협상을 위한 극적인 상황반전을 취할 시 북한도 극단적 행위보다는 실리 추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4. 핵 실험

##### 1) 1차 핵실험

북한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사전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예고하고 6일 후에 핵실험을 강행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최초의 핵실험을 사전에 예고한 나라는 전 세계 9개 핵보유국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다.

2006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 미국의 극단적인 핵 전쟁위협과 제재 압력 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방어적 대응조치로써 핵 억제력 확보의 필수인 공정상 요구인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 전파방지 분야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셋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 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상기와 같이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바대로 북한의 핵실험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렸지만 최초의 핵실험에서 목표했던 파괴력(TNT 4kt)의 25%에 해당하는 파괴력(TNT 1kt)을 얻은 것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첫 실험으로는 나쁜 결과가 아니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2차 핵실험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남한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2009년 1월 30일 조평통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sup>27)</sup>했고,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포했으며, 보름 뒤인 2009년 2월 2일 “남한과 동북아 주둔 미군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핵을 폐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위협은 공언대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 핵실험을 감행<sup>28)</sup> 하였는데, 이날은 2009년 4월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의 조치를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지 채 한 달이 넘지 않은 날이었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이 성공적이었고, 핵무기 위력이 강화되었다고 자평한 것처럼 제1차 실험 때보다 향상된 폭발력과 기술수준을 보여 주었다.

핵실험은 로켓발사 이후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기를 고조시킨 것이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문제에 직면한 북한에서 핵을 수단으로 군부가 밀어붙이기식 행위를 통해 대내결속을 강화하고 후계문제를 군부 주도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결의 1874를 내놓았다. 이는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제재 범위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718보다 넓어지고 수위도 한층 올라 간 것이다.<sup>29)</sup>

27) 조선중앙방송, 2006. 1. 30.

28)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 98년 5월 25일 또 한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조선중앙통신, 2009. 5. 25.)

29) 장용훈, “북, 제처리로 ‘핵 억제력 강화’ 위협 행동화”, 『연합뉴스』, 2009. 4. 25.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강력 비난하면서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하였다. 이는 다시 위기고조 행위를 통해 맞대응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 제 3 절 북한의 대내외 환경

#### 1. 대내외 정세

##### 1) 대내 정세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내세워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노동당 일당독재체제이다.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의 구조적 문제, 경제난 악화, 국제적 고립 등으로 체제불안정이 가중됨에 따라 북한은 선군정치 노선을 강화하고 총역량을 결집하여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꾀하고 있다.

2008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후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대규모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체제를 결속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 하였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sup>30)</sup>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제한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하였다. 더욱이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로 경제난이 더욱 가중되고 국가재정난이 심화되어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의 존속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시행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sup>31)</sup> 등 총동원 방식의 경제회생 노력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sup>32)</sup> 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으나 급격한 물

30) 1990년대 악화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북한이 2002년 7월 1일부로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경제개혁 조치를 말한다.

31) 2009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적 노력동원운동으로 150일 전투는 4월 20~9월 16일, 100일 전투는 9월 23일~12월 31일로 추정.



가 상승, 경제활동 위축, 민심 이반 등으로 실패하여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본주의 등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주민들의 사상이 이완되고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었으며, 접경지역 탈북자가 늘어나는 등 체제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주민동원과 사상학습 강화 등의 주민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체제불만 세력이 김정일 체제에 저항할 만큼 조직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2) 대외 정세

북한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체제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sup>32)</sup> 채택과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상태에 있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여 체제유지와 경제회생 기회를 살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과 2010년 5월과 8월 김정일의 방중 등을 통해 중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에게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미·북 양자회담을 통한 체제 보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에 부딪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안보상의 전략적 이익 확보와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해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의 더 강화된 대북제재를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은 역내 국가들 이외에도 아프리카·중남미 등 비서방권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해 나가면서 유럽 국가들의 대북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32) 2009년 11월 30일 구권과 신권을 100 : 1로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치였다.

33)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9년 6월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 3) 대남 정책

북한은 2009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내세워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대정책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2008년 초반부터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우리 측 당국자의 일방적인 추방(2008. 3. 27),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2008. 11. 12),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차단(2008. 12. 1) 등 강경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북한은 2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2009년 상반기까지 전면대결태세 선언(2009. 6. 12), 정치·군사합의 무효화 선언(2009. 1. 30), 서울 불바다 발언(2010. 1.), 금강산 남측 자산동결(2010. 4. 8) 등 도발과 강경조치를 자행하였다.

북한은 2009년 하반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해소하고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대남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대청해전(2009. 11. 10)<sup>34)</sup>, 서해 NLL항해금지구역 설정 및 해안포 사격(2010. 1.), 금강산 남측 자산동결(2010. 4. 8) 등의 도발과 강경조치를 자행하였다.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약 2.5Km의 우리 영해에서 초계작전 중이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침몰시켰다.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전사한 이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었고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우리의 대북 조치에 대해 전면전, 3차 핵실험을 운운하면서 위협하였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연평도의 해병부대와 민간인 거주지에 무차별로 170여발의 포격을 자행하였고, 우리 군은 K-9자주포로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 이 도발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일본·독일·영국·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민간인까지 살상한

34) 2009년 11월 10일, 북한 경비정 1척이 대청도 동쪽해상에서 NLL을 침범하여 우리 고속정의 경고사격에 대해 조준사격으로 도발하여 발생하였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전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핵개발을 포함한 대남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8년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언급해 비난하면서, ‘비핵·개방·3000’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즉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비핵·개방·3000’ 공약에 대해서 “우리의 핵 완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 넘는 뉘드리로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 공세는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적십자 직통전화 단절, 개성공단 폐쇄위협 등으로 비난공세를 강화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햇볕·포용정책을 계승하도록 압박하였다.

우리 정부가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12월 1일 ‘중대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성공단 관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리위 직원 50% 철수, 둘째, 건설·봉사업체 등 모든 입주업체 상주인원 절반 축소, 셋째, 100만평 경계주변을 포함한 경험·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제한·차단, 넷째, 참관·관광·경협 등을 목적으로 한 육로통행 제한 차단, 다섯째, 남북경협협회사무소 폐쇄, 여섯째,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 중지, 일곱째, 봉동~문산 철도열차 운행중지 등이다.

## 2.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 1) 김정은 후계체제 등장 의미

2010년 9월 28일 김정은은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는데, 2009

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지 약 20개월 만에 국내외적으로 공식화 한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등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8월 이후 악화된 김정일의 건강문제로 생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되고 바로 6년 후인 1980년 공식화 된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sup>35)</sup> 김정은의 등장이 파격적인 것은 비단 시간만이 아니다. 북한에서 후계체제는 후계자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완성할 때 비로소 끝이 난다.<sup>36)</sup> 고 할 수 있다.

후계자의 조직체계란 첫째,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조직공간을 차지하는 것이다. 둘째, 그 조직공간을 후계자에게 충실한 엘리트들로 채워 후계자의 자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sup>37)</sup>

김정은의 조직체계는 우선 그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았다는 것이 파격적이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의에서 드러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엘리트 구성보다 북한의 무력과 체제보위 기능을 더 강화시킨 조치를 취한 것이다.

조직지도부가 인사권, 검열권, 보고권을 틀어쥐고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완수했다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현존하는 무력을 총 집결시켜 후계자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진행되는 동안 지난 2011년 3월 북한은 남한의 초계함인 천안함에 대해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으로 우리군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앗아갔다. 이어 11월 23일에는 연평도에 무차별적 포격으로 세계인이 천인공노한 반인도주의적이고 탈법적인 무모하고도 잔악한 도발을 감행하는 등 군사모험을 감행한 바 있다.

2010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미국에게 우

35) 김정일은 김일성이 55세가 되는 1967년 당 선전선동부 과장, 1969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었고, 김일성이 61세가 되는 1973년 당 조직비서 겸 선전비서가 되면서 사실상 실권을 장악했다.

36) 북한의 세습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1단계는 국방위원회, 2단계는 노동당, 3단계는 내각, 4단계는 주민대상으로 후계 작업을 진행하여 북한이 공언해온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시 김정은 후계체제를 대내외적으로 공식 출범하는 계획이다. (조봉현, 상계서, p.21.)

37) 김정일은 1973년 후계자로 내정되기 전 이미 조직지도부 부장 겸 비서, 선전선동부 부장 겸 비서로 선출되었고 조직지도부를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직공간으로 적극 활용했다. 또한, 그 조직지도부의 엘리트들을 당시 김정일이 맡고 있었던 3대혁명 소조원들로 채웠다.

라늄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모두 이전과 전혀 다른 형태의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한 의도적 행위라 생각된다.

## 2) 3대 권력세습 조기 시행 배경

첫째, 김정일의 건강문제에 따른 북한 권력체제의 위기상황일 것이며, 김정일도 부자 세습을 위해 자신의 승계과정을 분석하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2인 지도체제에서 1인 지도체제로 바뀌어 갔는데, 1980년대 6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분할 통치됐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김정일 위원장이 1974년 첫 당직인 중앙위원을 맡고 1980년 공식 후계자로 등장할 때까지 6년이나 걸렸지만 김정은은 인민군 대장 직함을 받은지 13일 만에 후계자로서 당직과 주석단 등장까지 매듭지었는데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이 당권을 장악하고 군권을 확보하는 승계과정을 거치기에는 김정일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당과 군권의 동시 장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방법이 당 군사위원회를 주목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세습 과정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2-2]과 같다.

[표 2-2]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권력세습 과정 비교

| 구 분     | 김정일                              | 김정은                              |
|---------|----------------------------------|----------------------------------|
| 첫 공식 직함 | 당 중앙위 위원(1974년)                  | 인민군 대장(2010년 9월 27일)             |
| 후계 공식화  | 1980년 6차 당 대회(38세)               |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27세)          |
| 노동당 직위  | 정치국 상무위원,<br>비서국 비서,<br>중앙군사위 위원 | 중앙군사위 부위원장,<br>중앙위원회 위원          |
| 주석단 등장  | 1980년 6차 당 대회                    | 당 창건 65주년<br>중앙보고대회(2010. 10. 9) |

2010년 노동당 대표자회의 시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군

사위원회가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 모든 군사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sup>38)</sup> 라고 규정해 김정은이 현재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을 통해 기능이 거의 유사한 국방위원회의 권한까지 거머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 대한 당의 통제권을 강화해 김정은이 당을 통해 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넓혔다.

따라서 당대표자회를 통해서 당을 정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후계자로서 권위를 부여하면서 주민들을 교양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금번 개정된 노동당 규약 46조에서는 군내 당 조직의 성격을 ‘인민군은 김일성이 창건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당의 영도 밑에 진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의 군 영도를 명시하고 군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대표자회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최측근들을 임명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도하는 부위원장 직위에 김정은을 보직시켜 김정일 건강을 고려시 단숨에 당과 군을 장악하는 지도자적 지위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조기 등장시킨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은이라는 후계카드를 내세워 미국의 관심을 끌어들인 다음 핵 협상력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의도에서다.

최근 북한은 대미외교와 핵 협상을 주도해 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부총리에 임명해 대미 외교라인을 격상시켰고, 후계자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와 함께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다는 뉴스를 의도적으로 미국의 낫 시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방영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10일 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을 치르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취재단 약 80명을 초청한 후 군 열병식을 통해 신형중거리탄도미사일과 신형지대공미사일 등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생중계한 것 역시 미국과의 핵 협상력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 속에서도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제거하기 보다는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과 체제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

38) 북한 노동당 규약, 제3장 27조.

### 3) 북한 권력체제 안정화 전망

북한체제는 수령이 당과 국가를 지배하는 수령제 국가이고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령 유일지배체제이다.

39) 따라서 3대 세습체제는 혈통승계와 수령승계 등 권력승계 전례에 따라 김정일의 권력 세습과 유사한 방식으로 될 것이고 김정은은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이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을 개척한 수령들에 의해 순조롭게 발전되어 온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권력승계를 둘러싼 투쟁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했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령의 후계자 문제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기 위해 후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이나 사회주의 헌법에 최고지도자의 선출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고 후계자 선출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 권력승계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며, 후계자가 수령의 권위와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권력승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혈통승계의 방법을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헌법 개정은 김정일이 김정은의 통치공간을 조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시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개정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영도자로서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명시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김정은에게 당·군권을 이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은 2대 세습에 비해 훨씬 순조롭게 안정화<sup>40)</sup> 될 것

39) 북한 사회는 수령-당-인민대중이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정점에 최고지도자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후계자는 이 체제의 계승을 전제로 하여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후계자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이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고 혁명을 개척한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후계자를 내세우고 그의 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워서 당이 변질되지 않고 당의 위업이 끝까지 수행될 수 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교훈은 후계자를 옳게 내세우지 못할 때에는 배신자들에 의하여 당이 농락되고 그 위업이 파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 내부 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 서울 : 세계평화통일학회, 2008, pp.10-11.)

40) 소련과 중국, 루마니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권력승계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

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의 권위가 김일성처럼 당보다 우위에 있고 당내에서 이미 혈통승계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혈통승계를 공식적 선출방법으로 정당화하는 후계자 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대 세습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3대 세습과정에서 김정일이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느냐는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 경험이 없으며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짧은 기간에 걸쳐 후계자로 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지배계층들의 진정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당·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하게 되면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지배계층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후계체제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당·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김정일의 보호가 사라진다면 일부 지배계층들이 도전을 감행함으로써 권력투쟁이 진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생존했을 때 최소한 당권을 장악해야 하고 군과 감시기구를 장악함으로써 지배계층들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도전들을 극복해야 한다. 김정일 생존 시 김정일과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시켜야 하고, 김정일 사후에는 완전히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통제해야 한다.

또한 지배계층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 하며 점차적으로는 지배계층들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김정은 체제의 장기적 생존은 경제위기와 핵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을 재생시키기 위한 정책변화를 시도할 것인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3대 세습자인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의 정책을 비판하

---

문에 권력승계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투쟁이 발생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확실한 권력이양 수단이 없었고 후계자 선출을 위한 정치적 규칙도 없었으며 후계자가 전임자의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단도 없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겪었던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 하고 후계자에 의한 수령의 권위와 권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혈통 승계·수령 승계를 제도화 했다.



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김정은과 핵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혈통승계의 특성상 김정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 계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배계층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현상유지나 제한적 변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자신과 지배계층들의 권력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근본적 정치개혁은 추진하지 않고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령의 권력안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 김정일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후계체제는 경제위기와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기존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후계체제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실패하면 체제 몰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김정은 체제는 실패한 북한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불안정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북한 재생을 위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권력 불안을 야기하고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도 없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정권유지와 지배층의 기득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한 현재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배계층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들과 강력한 지배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진행 시키려고 할 것이다.

2010년 11월12일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한 것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특유의 동시다발적 ‘벼랑 끝 전술’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3대 세습체제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군부 강경파가 충성경쟁 차원에서 공세카드로 사용한 것이다.

북한의 근본적 정책변화가 일어나려면 김정은 후계체제가 지배층의 이익이 아닌 인민의 이익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배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북한 정권이 지배층의 이익이 아닌 인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때 핵 포기를 통해 국제사회로 편입되면서 과감한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4) 향후 김정은의 예상 행보

김정일은 2010년 9월 27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김정은을 포함 김정희, 장성택, 최룡해 등 6명과 함께 대장 군사칭호를 부여하였다. 이어서 이튿날인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의 및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009년 1월부터 김정은 후계자 내정설이 나돈 이후 최근 대장칭호를 부여 받으며 김정은의 사진이 배포된 것은 이러한 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상하기 힘든 빠른 진행이며, 김정일이 38세가 되어 후계자로서 대외에 얼굴을 드러낸 것과 27세의 젊은 김정은의 최근 대외 노출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후계세습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일 건강문제로 세습체계를 확고히 하여 체제안정을 구축하고자 모든 정치적 포커스를 권력승계 문제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내부소식을 전해 온 대북 민간매체들은 북한이 계속되는 조치로서 군복을 입은 김정은 초상화 1,000만여 장을 제작해 놓은 상태라고 전한다. 이런 조치는 그동안 ‘청년대장’으로만 알려졌던 김정은이 3대 세습의 후계자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물론, 이 사진 밑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상교양 학습을 강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9월 30일 공개된 당대표자회의 동영상은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 없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데 충분하였으며, 앞으로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동 현 지지도 활동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들을 묶을만한 강력한 고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고집해 온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핵문제를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측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당 대표자회의가 끝나자마자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2010년 9월 2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

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길연의 발언은 당 대표자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세습공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되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의 핵무기는 자기방어를 위한 억지력”이라며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부여하면서 “선군정치에 의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전쟁터로 변했을 것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자국의 핵과 핵무기는 한국의 평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발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전략은 김정일·김정은 공동정권 하에서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통로보다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대외적 강성발언으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미국 등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 확고히 구축되지 않은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당대표자회의 이후 유엔에서의 강성발언, 한국을 제외한 평화협정 제안과 성과 없이 끝난 남북군사 실무회담 등을 총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북측의 현재 상황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치적을 위한 첫 포성으로 ‘핵 억지력 강화’를 내세우고 자국의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정은 치적을 홍보하기 목적 하에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 적수 앞에서는 더 강한 포스를 드러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이라는 아직은 독립적이지 못한 약한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은 앞으로 군사적 능력을 포장하기 위한 제한된 군사적 도발 등이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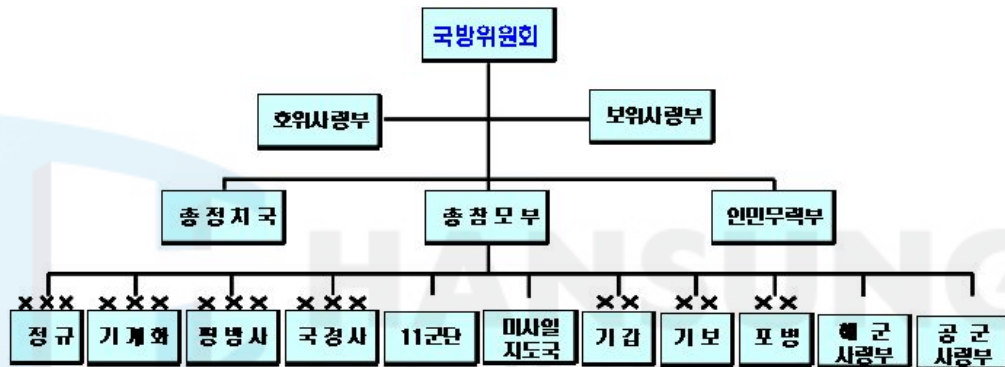
따라서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 군사 위협

#### 1) 군사지휘구조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106조, 제109조에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로서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 당정치국 상무위원을 겸직하면서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의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하고 있는데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아래의 [표 2-2]과 같다.

[표 2-2] 북한 군사지휘기구도



\*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2010. 12. 3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군 조직으로는 호위사령부와 보위사령부가 있는데 호위사령부는 김정일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핵심시설 경비 임무 등을 수행하고, 보위사령부는 반김정일 세력을 단속하는 군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 군수, 행정,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 2) 군사전략

북한은 주체사상을 명분으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주장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해 왔다. 북한은 1962년 4대군사노선<sup>41)</sup>을 채택한 이후 군

41)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군 요새화

사 우선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는 선군정치를 내세워 대남 우위의 군사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의 기본 목표는 대남 적화통일로서 김정일·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군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요체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첨단전력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 공격수단으로서 우리 군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 3) 군사능력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 9개의 정규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11군단, 미사일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북방한계선 일대에 준비된 갱도진지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전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 집중사격이 가능하다. 기갑·기계화 부대의 주축은 T-54/55와 T-62 전차를 개량한 천마호 전차이며, T-72 전차를 모방한 신형전차를 개발하여 작전 배치하였다. 신형 폭풍호 전차 배치에 따라 교체된 노후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경보병사단<sup>42)</sup>을 전방군단에 편성하였고 전방사단에 경보병 연대를 추가 편성하는 등 특수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들은 땅굴·AN-2기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후방지역으로 침투 후 주요 목표 타격·요인암살·후방교란 등의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아래 [표 2-3]와 같다.

42) 전방군단 예하에 편성되어 있으며, 산악으로 침투하여 군단작전에 기여하거나 대규모 배합작전 및 후방교란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부대.

[표 2-3] 북한 지상군의 주요 장비 현황

| 구분 | 전차       | 장갑차      | 야포       | 방사포      | K-61/S형 부교 |
|----|----------|----------|----------|----------|------------|
| 수량 | 4,100여 대 | 2,100여 대 | 8,500여 문 | 5,100여 문 | 3,000여 대   |

\*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2010. 12. 31)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 40여개 기지,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해군 전력의 큰 변화는 없으나, 잠수함 전력과 신형 어뢰 등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군 전력도 약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 기습공격이 가능하나 독립된 해군 작전보다는 지사군 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의 진출지원과 연안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 할 것이다.

수상 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화력지원경비정으로 구성된 수상전투단 또는 단독 함정에 의한 대함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기상 악화시 기동성이 약화되고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상어급 잠수함과 연어급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뢰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임무 등을 수행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무기체계가 월등히 앞서 있는 우리 군함을 신형 어뢰로 공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전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륙 전력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건조된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총 260척과 소해정 30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저격여단과 해군정찰대대는 은밀 침투하여 레이더와 해군기지 등 중요시설을 타격하고 상륙해안의 중요 지역을 확보하여 대형 상륙함이 필요 없는 단거리 기습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북한 해군이 보유 중인 주요 함정은 아래 [표 2-4]과 같다.

[표 2-4] 북한 해군의 함정 현황

| 구분 | 수상전투함  | 잠수함정  | 상륙함정   | 소해정   | 기타    |
|----|--------|-------|--------|-------|-------|
| 수량 | 420여 척 | 70여 척 | 260여 척 | 30여 척 | 30여 척 |

\*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2010. 12. 31)

공군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 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 이후 도입한 항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항공기는 매우 노후 되었으나, 신형 전투기 도입 등의 전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전력을 배치하였으며, 이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하여 우리의 중요 시설에 대한 기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전쟁 초기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우리의 방공자산, 보급로, 산업 및 군사시설, 국가기반시설 등을 타격할 것이다. 특히 AN-2기 DHK 헬기를 이용하여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방공체계는 공군사령부 예하에 항공기, 지대공미사일, 고사 포, 레이더 탐지부대 등으로 통합 구성되어 있다.

북한 영공은 4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1차적인 방공임무는 비행사단에 위임되어 있다. 평양 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지역에 SA-3, 휴전선 일대와 해안지역에는 SA-2와 SA-5지대공미사일을 다중으로 배치하였다.

전술 고사포는 지상군 기동부대를 방호하고, 전략 고사포는 주요 도시, 항만, 군수산업시설 등을 방호하기 위해 집중 배치되어 있다. 지상관제요격기지, 조기경보기지 등의 레이더 운용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는 물론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방공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였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아래의 [표 2-5]와 같다.

[표 2-5] 북한 공군의 항공기 현황

| 구 분 | 전투기    | 정찰기   | 공중기동기  | 헬기     | 훈련기    |
|-----|--------|-------|--------|--------|--------|
| 수 량 | 820여 대 | 30여 대 | 330여 대 | 300여 대 | 170여 대 |

\*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2010. 12. 31)

예비전력은 교도부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가 전시동원 대상으로 총 770만여 명에 달한다. 북한 예비전력은 아래의 [표 2-6]과 같다.

[표 2-6] 북한 예비전력 현황

| 구분      | 병력      | 비고                                    |
|---------|---------|---------------------------------------|
| 교도부대    | 60여만 명  | 전투동원 대상<br>(남자 : 17~50세, 여자 : 17~30세) |
| 노동적위부대  | 570만여 명 | 향토예비군 성격                              |
| 붉은청년근위대 | 100만여 명 | 중학교 군사조직                              |
| 준군사부대   | 40만여 명  |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br>군수동원지도국, 속도전 청년돌격대    |
| 계       | 770만여 명 | .                                     |

\*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2010. 12. 31)

이중 교도부대는 핵심 예비전력으로 편성과 훈련 면에서 정규군에 준하는 수준이며, 정규군의 장비 현대화로 교체되는 주요 장비들을 인수하여 전력을 보장하고 있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1960년대 영변에 핵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핵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 기술을 집중 연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 5MWe 원자로를 가동하여 얻은 폐연료봉을 2009년까지 4회에 걸쳐 재처리하여 4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2009년 4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개발을 시사한 이후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2,000여 개를 가동 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 사거리 3,000Km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sup>43)</sup>을 작

43) 무수단 : 북한의 미사일 개발시설이 위치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의 지명으로 명명.



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과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에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으며,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미사일 종류별 사거리는 아래의 [표 2-7]과 같다.

[표 2-7] 북한 미사일 종류별 현황

| 구 분     | 스커드 | 노동    | 무수단   | 대포동   |
|---------|-----|-------|-------|-------|
| 사거리(km) | 500 | 1,300 | 3,000 | 6,700 |

\*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2010. 12. 31)

북한은 약 2,500~5,000톤의 다양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분산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지속능력과 군수동원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에너지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은 300여 개의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전시전환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갭도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약 2~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추가 구입과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다.

## 제 3 장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급변사태 가능성

### 제 1 절 북한의 핵개발 능력

#### 1. 핵개발 과정

북한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 미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sup>44)</sup> 그러나 핵무기 개발은 소련의 견제와 낮은 기술적 수준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북한과 소련은 1955년 2월 2일 과학기술협정, 1957년 10월 11일 과학협력협정 등을 맺으면서 핵연구와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1956년 모스크바 인근 Dubna에 핵 연합연구소 설립에 참여하였고, 오늘날 80%의 북한 핵전문가들이 이 연구소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은 1959년 맺은 원자력 협정에 근거하여 영변에 핵연구센터를 건설하고 그곳에 IRT-2000이라 불리는 핵연구용 원자로를 설치하였다.

북한 당국의 핵개발 의지는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발언으로 공식 표명되었다. 1965년 소련 기술자들이 떠난 뒤에도 소련은 영변의 원자로에 핵연료를 공급해 주었다. 이 원자로는 최초 2MW의 전력이었으나 7MW까지 높였다. 당시 중국도 북한의 핵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원자로 건설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소한 1970년대 중반까지 핵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물질적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판단은 비슷한 시기 북한이 중국에 핵무기 개발 기술이전과 ‘핵우산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뒷받침된다.<sup>45)</sup>

44)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우월성에 대하여 핵 억지 정책을 취하였고, 그리하여 일찍이 1950년대에 핵무기를 남한에 들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단계적 후퇴전략의 틀 속에서 핵 타격을 통한 억지전략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전방의 미 제2사단을 핵 전력을 갖춘 사단으로 재편하였다. 1973년에 전진방어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핵무기는 전방에서 철수하되 군산 공군기지의 무기고에 통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욱,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위하여”, 『민주법학 제33호』, 서울: 관악사, pp.235~236.)

다만, 북한이 그때까지 축적한 핵관련 과학기술 수준과 군수산업을 활용하여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sup>46)</sup>

1970년 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 아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지침을 내놓았고, 핵 열반응 분야의 연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1970년대 들어 북한이 핵물질 개발과 관련된 시설건설에 소련의 참여를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부터 소련은 북한의 독자적 핵개발 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미·소간에 대규모 핵무기 보유에 입각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동서 양진영의 핵 비확산에 공감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12월 26일 북한과 소련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제기술협정을 체결하였다.<sup>47)</sup>

1980년대 중반 북한 지도부는 핵발전소 건설을 정책과제로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에 작용한 두 가지 주요 요인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과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다. 남한은 이때 이미 세 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었고, 여섯 기의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었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체를 보이고 있었다.

김정일은 1985년 8월 3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연료의 자립과 석탄으로 편중된 문제해소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력·화력 발전소와 함께 제시하였다. 1980년대 후반, 냉전 해체가 시작되고 그 여파로 북한의 주변 안보환경이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의 적극적인 핵무기 개발시점은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핵개발 과정의 특징을 다음 3가지로 도

45) 1975년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주은래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같이 말하였고, 중국은 과학적 교육 등 제한적으로 응하였다. 1977년 3월에는 강성산 노동당 비서가 중국에 핵실험 연구시설과 탄도미사일 개발기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46) 다른 한편, 북한이 남한의 핵개발 정책과 대조적인 비핵 이미지 제고 일환으로 1974년 IAEA가입, 1977년 IAEA핵안전협정의 하나인 ‘Type 66’에 가입하고 소형 원자로에 대한 IAEA사찰을 수용한 예를 들 수 있다.

47) 이 협정은 소련이 북한의 원자력 설계, 건축, 발전소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제공키로 하고, 북한은 비용지불과 시설의 군사적 적용금지에 합의한 사항이다.

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오랜 시간을 거쳐 핵 관련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둘째, 초기 외부 의존단계에서 독자적 개발로 발전해 왔으며, 셋째, 핵무기 개발은 1980년대 말까지 소련에 의해 억제되어 왔다.

북한에게 1980년대 말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주어진 조건에서 세 번째가 소멸되고 안보환경이 급격히 열악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 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높았던 시기라고 분석하고 있다.

## 2. 핵시설 현황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이 건설한 핵시설은 아래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92년 NPT 전면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면서 IAEA에 신고한 리스트이며, 이 리스트는 이미 드러난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관련된 핵 시설이다.

[표 3-1] 북한의 핵시설 현황

| 구분  | 시 설 명                | 규 모            | 위 치 | 비 고                                    |
|-----|----------------------|----------------|-----|----------------------------------------|
| 1   | 연구용원자로(ITR-2000)     | 1기             | 영변  | 1965년 가동(2→ 8MWt로 확정)                  |
| 2   | 임계시설                 | 1기             | 영변  | 0.1MWt                                 |
| 3   | 5MWe 실험용발전소          | 1기             | 영변  | 25MWt(79년 착공, 86.1가동)                  |
| 4   | 방사화학 실험실<br>(재처리 시설) | 1개소<br>200t/yr | 영변  | 85년 착공, 95년 완공<br>6층 높이, 길이 180m, 폭20m |
| 5   | 방사화학 연구소             | 1개소            | 영변  | Pu 추출, 핵연료 가공                          |
| 6   | 핵 연료봉 저장시설           | 1개소            | 영변  | 사용 중                                   |
| 7   | 준 임계시설               | 1기             | 평양  | 김일성대학 5MWe                             |
| 8   | 50MWe 원자력발전소         | 1기             | 영변  | 85년 착공, 95년 완공예정, 연기                   |
| 9   | 200MWe 원자력발전소        | 1기             | 태천  | 89년 착공, 96년 완공예정, 연기                   |
| 10  | 우라늄 정련공장             | 120t/yr        | 평산  | 1982년 가동, 폐쇄 예정                        |
| 11  | 우라늄 정련공장             | 120t/yr        | 박천  | 1990년 가동                               |
| 12  | 우라늄 광산               | 1개소            | 평산  | 매장량 2,699톤<br>가채 량 400만 톤              |
| 13  | 우라늄 광산               | 1개소            | 순천  |                                        |
| 14~ | 원자력발전소(경수로)          | 3기             | 신포  | 635MW 3기, 계획단계에서 취소                    |

|    |               |     |           |                         |
|----|---------------|-----|-----------|-------------------------|
| 16 |               |     |           |                         |
| 17 | 동위원소 생산가공연구소  | 1개소 | 영변        | 미신고                     |
| 18 | 미신고 시설        | 3개소 | 영변        | 폐기물 저장소로 추정             |
| 19 | 고폭 실험장        | 2개소 | 영변,<br>태천 | 플루토늄 잔해 잔존 추정           |
| 20 | 핵에너지연구 과학연구센터 | 1개소 | 영변        | 2,000명 근무, 62년 설립       |
| 21 | 팽성 원자력 연구소    | 1개소 | 팽성        | 5,000~6,000명 근무, 82년 설립 |
| 22 | 박천 원자력 연구소    | 1개소 | 박천        | 최대 8,000명 근무            |
| 23 | 나남 원자력 연구 분소  | 1개소 | 나남        | 1980년 설립                |
| 24 | 원산 원자력 연구소    | 1개소 | 원산        | .                       |
| 25 | 김일성대학 핵물리학부   | 1개소 | 평양        | 1982년 신설                |
| 26 | 평양과학대학 핵물리학부  | 1개소 | 평양        | 1982년 신설                |
| 27 | 김책공대 핵물리학부    | 1개소 | 김책        | 1980년 이전 설치             |

북한이 신고한 16곳의 핵시설 가운데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과 흑연 감속로인 5MWe급 시험용 원자력 발전소는 IAEA에 신고한 뒤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가동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운영이 중단되었다.

영변의 IRT-2000 시험용 원자로는 계속 가동 중이고, 태천의 원전을 비롯한 3개소는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신포에 건설키로 했던 구소련의 VVER형 경수로 3기 대신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따라 한·미·일·EU와 KEDO에 의한 1,000MWe급 원자로에 대한 사찰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시설 2곳과 5MWe급 원자로에 대한 사찰도 아직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KEDO가 북한의 신포시 금호리에 건설하던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공급되기 이전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찰시점과 기간을 두고 IAEA측과 이견으로 마찰을 빚었다.

### 3. 탄도미사일 위협

탄도미사일은 기존의 다른 재래식 무기체계와는 달리 이를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는 위협적인 무기이다. 재래식 고폭탄뿐만 아니라, 생화학 및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용 탄두를 탑재하여 발사가 가능하다.

대량살상용 탄두는 탄착점의 오차가 클지라도 살상효과가 매우 크기 때

문에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테러용으로 사용될 경우 심리적 공포를 조장하는 등 현대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sup>48)</sup>

북한은 개발한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사정거리 50km인 구 소련제 FROG-5지대지 로켓을 도입하면서 1969년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여 1976년 중국의 DF-61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다가 중국의 미사일 개발 포기로 소련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후 1979년 소련제 스커드 B 미사일을 도입하여 독자 개발하려 했으나 소련의 기술이전 거부로 또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방으로부터 여러 번 고배를 마신 북한은 1981년 이집트와 미사일 개발 협정을 맺고 스커드 미사일과 이동형 발사대(TEL)를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1984년 이집트에서 도입한 미사일을 역설계해 스커드 A를 개발,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북한은 스커드 B를 1986~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북한군에 먼저 배치하지 않고 개발비를 지원해준 이란에 1986~1988년 사이 1백발을 제공했다. 이 미사일은 1988년 이란과 이라크의 도시전쟁에 사용됐다.

북한의 스커드 B 생산능력은 연간 100발로, 보유량은 5백여 발로 추정된다. 스커드 C는 스커드 B의 사정거리를 연장한 개량형으로 현대적인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 연료를 더 싣기 위해 로켓의 길이를 늘였다. 이 미사일은 1,000kg의 탄두를 장착할 경우 사정거리가 400km, 700~800kg의 탄두를 실으면 사정거리가 500~550km가 된다.

북한은 1989년에 스커드 C를 제작,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란과 시리아에 60대를 팔았고, 월 4-8기를 생산할 수 있다.

북한군은 스커드 B와 C로 구성된 스커드 여단을 인민무력부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여단에 27개의 스커드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1988~1989년 사이에 스커드 C와 병행하여 개발이 시작된 노동 1호는 사정거리가 1천km나 되는데다 화학무기는 물론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처음으로 전략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노동1호는 이전 미사일과는 다른 중국제 DF-3(러시아제 CSS-2)을 본

48) 김병용·엄종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특징과 우리의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69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p.77.

때 스커드 엔진 4개를 묶어 사거리를 연장했다. 노동1호는 1993년 5월 29일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의 이동발사대에서 동해로 시험발사해 500km를 비행한 바 있다.

북한은 동북아의 일부와 일본 열도 일부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노동1호를 이미 실전배치한 상태이며,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이 대포동 1호는 1천5백km를 날아 일본 동북방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대포동 1, 2호를 1990년 초부터 동시에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험 발사된 대포동1호의 사정거리는 1천5백~2천km로 알려졌으며, 미국 국방정보본부(DIA)는 북한이 개발 중인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를 4천3백~6천 km로 추정한다.

탄두를 탑재하면 알래스카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 일부가, 가벼운 탄두를 탑재하면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대포동 2호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에는 정상탄두로 해야 되지만 생물 핵무기나 화학탄두인 경우에는 탄두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정확도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데, 스커드 B는 300km 비행에 450~1,000m의 오차를, 스커드 C는 스커드 B보다 정확도가 30% 가량 개선됐으나 선진국의 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낮다.

노동1호는 1,000km 비행 후 오차가 2~4km나 돼 군사시설과 같은 점표적보다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대한 무차별적 선제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포동 1호도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오차가 커서 북한은 오차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3-2] 북한의 미사일 제원<sup>49)</sup>

| 구 분      | SCUD-B | SCUD-C | 노동    | 무수단<br>(IRBM) | 대포동1호 | 대포동2호     |
|----------|--------|--------|-------|---------------|-------|-----------|
| 사거리(km)  | 300    | 500    | 1,300 | 3,000이상       | 2,500 | 6,700이상   |
| 탄두중량(kg) | 1,000  | 770    | 700   | 650           | 500   | 650~1,000 |
| 비 고      | 작전배치   | 작전배치   | 작전배치  | 작전배치          | 시험발사  | 개발 중      |

49) 김태우, “핵위협과 핵우산”, 『신아세아 제16권 제3호』, 서울 : 신아시아연구소, 2009, p.17.



이와 같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군사용으로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핵무기를 장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sup>50)</sup>

#### 4. 핵 보유능력

##### 1) 플루토늄 프로그램

북한 핵능력 판단의 근거가 되는 플루토늄은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에서 다양하게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북한이 미국에 제출한 18,822쪽 분량의 핵자료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2008년 6월에 제출한 핵 신고서는 북한의 핵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핵자료는 북한이 37kg의 플루토늄을, 그리고 핵 신고서는 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이라 기술하고 있으며, 핵 신고서는 북한이 핵개발에 약 25.5kg을 그리고 2006년 10월 시행된 지하핵실험에 2kg을 사용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자료들에 의해 명기된 플루토늄 분량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추정했던 40~50kg으로 신고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더욱이 추출한 플루토늄 외에도 미추출된 플루토늄과 핵시설의 장비 내에 남아있는 플루토늄까지 합산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체 분량은 신고한 양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러나 2009년 5월 실시한 제2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5~7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sup>51)</sup> 되기 때문에 플루토늄 추출량은 이전에 산출한 추출량에서 사용한 추출량을 빼면 된다.

플루토늄 분량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플루토늄

50) 핵무기가 서울에 사용된다면, 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서울은 경제·산업의 중심지로 GDP의 21%, 금융의 50%, 첨단기술 기업의 43%, 외국인 투자의 59.3% 등을 점한다. 전문가들은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서울을 대상으로 20kt급 핵무기가 지면폭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24시간 이내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kt의 경우 인구의 절반인 580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서울이 거대한 용광로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우, “핵위협과 핵우산”, 『신아세아 제16권 제3호』, 서울: 신아시아연구소, 2009, pp.17~18.)

51) 북한 핵무기에는 5-7kg 정도의 플루토늄이 들어가고, 핵실험에도 비슷한 양이 필요한데서 추산

30.8kg을 무기화했다는 정보가<sup>52)</sup> 있는데, 핵무기 1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무기급 플루토늄이 5~7kg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4~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플루토늄의 능력을 보여 주었는데,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는 핵실험이 핵장치를 폭발시킨 것으로 결론지으며 미완의 핵실험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의 핵능력은 재평가 되고 있다. 그것은 파네타(Leon Panetta)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의 서면자료를 통해 나타난다. 그는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고 증언<sup>53)</sup> 한 바 있는데, 이는 핵장치가 아닌 핵무기 폭발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무기 폭발실험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곧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 사령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는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보고 있으며,<sup>54)</sup> 엘라바데이 사무총장 역시 그렇게 보았다.<sup>55)</sup>

그렇지만 미 국방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부시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소형 핵무기를 제조한 것에 불과하며 국제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된 바는 없다.

## 2)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인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술을 습득하는 대가로 자국의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의 근간인 우라늄 기술을 이전

52) 해리슨 미 국제정책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이 북한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것을 기준. (Selig Harrison, "North Korea Claims to Have Weaponized Plutonium," CNN, January 19, 2009.)

53) 앞으로 미국의 정책목표는 북한의 핵 불용이 아닌 비핵 확산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비확산 정책으로 나갔지만 공식적으로는 핵 불용 정책으로 나갔다. 그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54)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05 : A Transformed World," NIC 2008-003(November, 2008), p.62.

55) 유지호, "IAEA 수뇌부 : 북한은 핵무장 국가", 『중앙 Daily』, 2009. 4. 22,

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파키스탄 핵무기 아버지로 추앙받는 칸(Abdul Qadeer Khan) 박사는 1993년 이후 북한을 13차례 방문한 바 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능력은 플루토늄에 비해 훨씬 작고 현 시점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우라늄의 양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핵자료와 핵 신고서는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북한은 오래 전부터 우라늄 프로그램을 부인해 왔다.

북한은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140톤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사실을 미국 측에 시인했지만 로켓탄 등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sup>56)</sup>

미국이 믿지 않자 북한은 해명을 하기 위해 미국의 북한 핵 불능화 실무 팀에게 알루미늄 튜브를 전달하자 거기서 농축 우라늄의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이다.<sup>57)</sup> 이 흔적은 바로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것 외 추가 증언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가동을 알리고 있다.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의 자서전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20여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를 구입했으며, 그 목적은 이를 역설계 해 2~3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제작하는 것이다.<sup>58)</sup>” 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칸(Abdul QuardeerKhan) 박사는 파키스탄이 2000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설계도, 소규모의 완성된 원심분리기,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목록을 북한에 제공했다.<sup>59)</sup>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소규모 농축시설과 가스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 국가정보국은 북한이 과거에 우라늄 농축활동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56) 주준형, “북, UEF 부인 일관, 성 김 과장에도 부인”, 『연합뉴스』, 2007. 12. 23.

57) Glenn Kessler, “Uranium Traces Found on N. Korean Tubes,” Washington Post, December 21, 2007.

58) 유미정, “전문가들,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에 엇갈린 의견”, 『Voice of America』, 2008. 2. 8.

59) 『파키스탄 칸 박사가 밝힌 북한 핵의 실체』, Radio Free Asia, 2004. 4. 17. : MunirAhmad, 『Scientist Says Pakistan Knew of Korea Nuke Deal』 Associated Press, July 4, 2008.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sup>60)</sup>

상기 증언과 발언을 뒷받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상당히 부족해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완전히 가동할시 매년 두 개의 우라늄탄을 생산할 수 있다.<sup>61)</sup>는 신중한 예측이 있다. 그러나 아직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수준이 실험단계로까지 접어들지 않았고 고농축 실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라늄 핵폭탄 개발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3) 우라늄탄과 플루토늄 탄의 비교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우라늄탄과 플루토늄 탄으로 구분한다. 천연 우라늄에는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가 0.7% 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99.3%로는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8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천연우라늄에 포함된 우라늄 235의 비율을 약 2~4%로 높여 주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농축’이라고 한다. 농축과정에는 원심분리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1년 내내 돌려야 폭탄 1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다.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는 길이 약 3m, 지름 약 20cm의 원통이다. 크기가 작은 만큼 큰 공간이 필요 없다. 더욱이 지하시설에 설치할 경우 발견하기 쉽지 않다. 농축과정을 통해 우라늄 235를 약 90%까지 고농축시키면 이것이 고농축 우라늄(HEU)이 되고 여기에 기폭장치를 장착하면 우라늄탄이 된다.

우라늄탄은 소규모 분산·은닉이 가능하고 방사능 누출위험이 없으며, 오래 보관해도 파괴력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 쉬워 원자로 없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던 국가들은 주로 우라늄탄을 개발한다.<sup>62)</sup>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원소로서 우라늄 238을 원

60) Michael McConnell,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Confirmation Hearing before US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February 5, 2008.

61) Christoph Bluth, 『Between a Rock and an Incomprehensible Place : The United States and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7-2(Fall, 2005), p.90.

62) 연합뉴스, 2009. 9. 4.

자로에서 가열하면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만 있다면 언제든지 플루토늄 239라는 핵폭탄의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플루토늄 239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핵폭탄의 재료로 쓸 수 없는 플루토늄 240으로 변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처리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조종장치와 같은 특수한 재처리설비가 있어야 한다.

플루토늄으로 폭탄을 만들면 우라늄탄보다 중성자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원자로 시설이 필요하고 동위원소의 불안정성과 고품장치의 결합작업에 정밀도를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핵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보관 시에는 파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sup>63)</sup> 두 번에 걸친 북한 핵실험은 플루토늄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였다.

## 5.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평가

북한은 가채량 4백만 톤 규모의 고품질 우라늄 원광을 갖고 있는데 특히 평산 우라늄광산은 순도 1.5~0.8인 양질의 우라늄을 생산해 내고 있어 핵 원료인 우라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채굴, 정제, 가공능력과 양질의 충분한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IAEA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여 우라늄탄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천연 우라늄에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U235가 0.7%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U235를 90%이상 농축하기 위해서 농축기술과 시설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농축 방법은 전기소요로 선택할 소지는 많지 않다. 가스 확산법을 선택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커서 외부에 노출되기 쉽고 레이저법은 북한의 기술이 뒤따르지 못하며, 원심 분리법은 대량의 주요부품을 수입이 불가피하여 외부에 적발되기가 쉽고, 노즐방법은 고농축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63) 아시아 경제, 2009. 9. 4.

따라서 북한의 경우는 IAEA가 이라크에서 발견한 전자장 동위원소 분리기를 사용하여 우라늄을 농축했을 가능성과 소규모 가스 확산법 등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기폭실험 증거는 1980년대 접어들면서 위성사진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위성사진에 의하면 1983~1991년 사이 핵물질이 없는 모의탄두의 격발시험 및 천연 우라늄의 기폭장치 실험을 최소한 71회 이상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지난 1992년 IAEA 핵사찰팀이 영변 핵단지에서 북한이 기폭장치 실험을 한 흔적이 있는 여러 곳을 직접 확인된 것으로 보아 북한은 기폭실험도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50여회의 기폭실험을 하면 핵무기 보유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기폭장치 실험이 완료되면 핵폭탄을 설계한 그대로 각종 장치를 모두 조립한 후에 Pu만 넣지 않고 핵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된다. 이것을 완제품 시험 또는 Package 실험이라고 한다. 이 완제품 실험에 직접 참가한 적이 있는 1993년도에 귀순한 이충국씨는 “당시 이 완제품 실험은 완벽했다.”고 증언 한 바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실제의 핵실험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북한이 보유 가능한 핵무기 종류는 플루토늄 탄과 고농축 우라늄탄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핵무기 특성 및 사용실적은 [표 3-3]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3] 핵무기 특성 및 사용실적<sup>64)</sup>

| 구 분          | 제조 방법                                                                                                      | 핵실험 필요성 | 사용 실적                                                                                  |
|--------------|------------------------------------------------------------------------------------------------------------|---------|----------------------------------------------------------------------------------------|
| 고농축우라늄 (H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 우라늄에 포함된 U235의 순도를 90% 이상 농축</li> <li>• 기체 원심분리법 사용</li> </ul> | 불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 8. 6일 히로시마 60kg HEU(TNT15kt)</li> </ul> |
| 플루토늄 (P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후 핵 연료재 Pu 239의 순도를 높인 것</li> <li>• 화학처리로 추출</li> </ul>        |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 8. 9일 나가사키 61kg HEU(TNT21kt)</li> </ul> |

64) The WHilliam J. Perry et al “U.S. Nuclear Weapons Policy”,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62(2009), p.59.

## 제 2 절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주장

### 1. 미국의 입장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전 정부의 6자회담이 알맹이 없이 시간만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대선 당시부터 북·미 직접회담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관성과 신중함을 보이면서 강경과 온건 대북 조치들을 융통성 있게 구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비교적 북한의 의도, 목표 협상전략 등을 잘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 두 정부 때 있었던 북핵 위기, 대북협상 경험, 실패 및 시행착오 등을 참고로 하면서 교훈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인다.

미국 내 많은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북한의 장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의 다각적 행보를 보면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성과를 전제로 보상부터 지불하거나 양보하는 우를 피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자국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일들이 산재한 미국에게 북한과 북한의 핵은 최우선 외교정책의 과제가 아니다. 미국은 경제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 아프간 전쟁 수행, 초당적 외교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미·북 관계개선 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주장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북핵 확산을 금지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5)</sup>

### 2. 중국의 입장

중국은 다른 핵보유국과 마찬가지로 핵비확산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핵보유국이 생기는 경우 현상이 변경되어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고, 비교적 소국이 핵을 보유하는 경우 기술적, 정치적으로 핵개발과 운용

---

65) 박계향, 전게서, p.85.



에 있어서 현존 핵보유국만큼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sup>66)</sup>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이 확산되는 경우, 이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일어날 것이며,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은 평화 속의 발전을 바라는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이 중국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으나, 핵 비확산체제에는 커다란 위협이 된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중국 영토를 거쳐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헤즈볼라 등에 수출된 바 있다고 확신한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철저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방어적인 핵전략을 견지하는 중국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조건에서도 비핵국가와 지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은 핵무기의 확산을 결연히 반대하며 국제사회의 핵 안전 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각국의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권리보장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sup>67)</sup>

이는 중국의 국가 지도자로서는 다자회의에서 처음으로 자국의 핵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북한의 주장

북한은 1964년 핵실험을 감행했던 중국의 핵실험 선언을 모방하여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핵실험의 목적을 위장하면서 “미국의 침략행위에 맞서서 최고의 이익과 안보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핵실험과 핵보유를 감행한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sup>68)</sup> 억제력으로 핵보유를 정

66) 최우길, “중국의 동아시아 전력과 한반도의 미래 :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10권 제2호』,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p.118.

67) 연합뉴스, 2010. 4. 14.

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억제력으로서의 핵무기의 유용성은 시대가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과 동시에 유일지배체제가 확고해 진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김정일이 국민들로부터 신적인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서방 권과 교류를 하더라도 체제붕괴의 위험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남북관계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인도와 같은 핵보유국 인정과정을 제외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인정과 관련된 발언은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4]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발언

|             |                                                                    |
|-------------|--------------------------------------------------------------------|
| 2007. 7. 31 | · 6자회담 대표 김계관, “인도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예외적 상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주장 |
| 2009. 1. 13 | · 외무성 대변인 성명, “先 북·미 관계 정상화, 後 비핵화 실현” 주장                          |
| 2009. 1. 17 | · 외무성 대변인 대담,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 라고 언급                      |
| 2009. 2. 2  | ·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적대관계가 유지되는 현 조건에서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핵보유국 간 핵군축이 유일한 방도”   |

결국 북한은 미국이 인도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핵무기 보유국 지위’ 하에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표명<sup>69)</sup>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보유와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보유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는 [표 3-5]에서 가늠할 수 있다.

68) 북한 외교부 성명, 2006. 10. 3.

69) 2009. 2. 14, Johns NSC 보좌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표 3-5] 북한의 핵보유 관련 발언

|              |                                                                                                                                                                            |
|--------------|----------------------------------------------------------------------------------------------------------------------------------------------------------------------------|
| 2005. 2. 10  | ·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핵무기 보유 선언 및 군축회담 주장                                                                                                                                          |
| 2006. 3. 11  | · 조중통, NPT에 미 가입한 핵무기 보유국은 인도와 동등한 대우해 줄 것 주장                                                                                                                              |
| 2006. 10. 9  | · 지하 핵실험이 성공했음을 선언                                                                                                                                                         |
| 2006. 12. 18 | · 김계관, 핵군축 회담 요구 및 NPT 미 가입 핵무기 보유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 반복해서 주장                                                                                                                  |
| 2008. 7. 23  | · 싱가포르 ARF 회의 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                                                                                                                                              |
| 2008. 12. 10 | · 조중방과 조선신보, “최근 발표된 미 국방성 연례보고서에 아시아 대륙에 중국, 인도, 파키스탄, 조선, 러시아 등 5개 핵무기 보유국들이 있다.”며 미 정부보고서가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 공식 인정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 주장                                             |
| 2009. 1. 17  | · 외무성 대변인, “북·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설사 조·미 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 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 또한 “조선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우리 핵무기 문제” 라고 주장  |
| 2009. 1. 17  | · Selig Harrison 방북결과 보고 시, “북한이 6자회담 비핵화 과정에서 신고된 모든 플루토늄(30.8kg)을 무기화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4~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북한은 “무기화된 30.8kg의 플루토늄은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
| 2009. 2. 2   | · 총참모부 대변인은 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                                                                                             |
| 2009. 4. 24  | · 조선신보, “미국이 압박할수록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다질 것이다.”고 주장                                                                                                                               |

황장엽 전 김일성대학 총장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핵으로 무장했으며,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전략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이의 실현을 위해서 어느 나라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의식하는 편이다. 미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힘들게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북한과 협상을 해 봐야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게 될 것이다. 차라리 중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협상목표를 김정일 정권과 후계체계의 생존과 유지에 두고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핵보유국 지위확보 하에 후계체제 구축과 경제재건에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주도권 장악으로 의지를 실현하고자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중심의 정치적 안정유지 및 후계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이른바 권력구조 재편과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한 체제결속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는 핵 및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 북·미간 대화를 압박하고 협상력을 증대시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후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등 최대한 양보를 획득하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 및 체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전 방위 압박과 위협을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북한은 2006년 10월에 실험한 것이 핵폭탄이 아니라 핵폭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핵 폭발장치’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전후로 미국은 ‘북한 핵 불용’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북한 핵이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미 행정부의 비공식적인 핵인정은 북한에 군사적으로 핵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아직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은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합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미간에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NPT 법 규정은 차치하고 핵 폐기를 두고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다.

NPT는 핵무기의 수평적 차원 즉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개발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

로운 핵보유국이 되거나 핵보유국 내에서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NPT에 가입한 이후 1993년 3월 12일에 탈퇴한바 있는데,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였다. NPT 법 규정에 보면 2006년에 핵실험을 한 북한은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sup>70)</sup>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 했더라도 현재 NPT를 탈퇴한 상태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

## 5.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의 관계

북한의 핵기술은 1986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한 자체기술 5MWe 실험용 원자로와 1995년 완공된 영변 50MWe 원자로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갔는데 NPT에는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의 특수한 체제와 더불어 북핵문제는 서서히 표면화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북핵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핵문제와 함께 장기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1993년부터 본격화된 제1차 핵 위기의 특징은 북한이 핵개발을 체제수호와 체제안정을 위한 유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3년 이전<sup>71)</sup>에는 북한이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맞서 장기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개발에 나섰다면, 그 이후에는 핵을 만지작거리며 체제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관계정상화를 하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협상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협상전략은 2002년 10월

70) NPT 제9조 제3항을 보면, 핵무기 보유국이라 함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67년 1월 1일 이전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를 제조 폭발시킨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며, 이들 5개국만이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 (이장근, “핵 비확산조약(NPT)의 의미와 2010년 NPT 평가회의”, 『국제지역정보 165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p.2.)

71) 전성훈,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비핵화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제5회 국내 학술회의 자료』,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10일 이후 불거진 제2차 북·미 핵 위기에서 더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핵비확산조약(NPT) 체제하에서는 향후 제2, 제3의 북핵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선언, 1998년 8월 대포동 장거리미사일 실험,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등으로 탈냉전 이후 NPT체제를 위협한 국가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다루고자 2003년부터 미·일·중·러·남·북한 6개국이 6자회담을 개시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 공동성명,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1874호에 의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핵 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NPT 체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자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대외적 위협에 의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 제 3 절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 1. 급변사태 논의의 배경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 스스로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외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급변사태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로 인하여 내란이나 무정부 상태로 악화되어 외부의 지원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5년 홍수 등 내부적으로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한 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토론되기 시작하였다.<sup>72)</sup>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럭(Gary Luck)대장은 1996년 3월의 미국의회 증언을 통하여 “북한의 붕괴는 그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붕괴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부각되었다.<sup>73)</sup>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북한의 붕괴 없이 1990년대가 경과하였고, 이로써 급변사태에 대한 관심도 약화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김정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으로써 재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학자들이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의 태도, 한국의 대응방향, 국제법적인 측면을 분석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2009년 하순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정권교체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붕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위한 조치와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 2. 급변사태 가능성의 부정적 의견

1990년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북한은 언제, 어떻게 붕괴할 것이냐에 대해 시간과 방법상의 문제로 판단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가와 체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붕괴는 잘못된 예측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오면서 다

72) 주한미군사령부에서는 북한의 붕괴가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분출되거나 내부폭발로 끝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①식량난 등 자원고갈 단계로부터 시작 ② 대상을 선별해 자원을 공급하는 차별화 단계 ③ 생존을 위협받음에 따라 각 지역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지역독립 단계 ④ 중앙정부의 억압단계 ⑤ 저항단계 ⑥ 폭력을 수반한 군열단계 ⑦ 권력재편의 7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당시에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박희락,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국가전략 제16권 4호, 성남 : 세종연구소, 2010, p.66.)

73) 조선일보, 1996. 3. 17.



시 한 번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전망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sup>74)</sup>

이는 절대 권력인 김정일 유고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김정일의 유고는 북한의 지배구조에 어떤 형식으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특히 20년 이상 권력수업을 거쳐 정권을 넘겨받은 김정일에 비해 김정일 사후 후계구도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북한을 더욱 불안정하게 보이게 한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북한 급변사태의 중요성과 과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체제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조기 붕괴론이 대두했던 1990년대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시각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장으로 셀리그 해리슨은 “1990년대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 주된 이유”라고 비판하고 있다. 셀리그 해리슨은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폭발해 산산조각 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쇠퇴해 지도층의 대변동과 체제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이 꼭 북한이라는 나라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정권의 앞날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오히려 북한의 붕괴와 생존의 중간적 형태로 오히려 김정일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체제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되, 붕괴는 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성장은 2009년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한국의 군사안보전략’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내란이나 무정부 상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일의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체제붕괴와 국가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74)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보도했고(2008. 9. 10), 폭스뉴스는 부시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 급변사태설까지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 위원장이 혼자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길어야 4~5년이라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김수민, 상계서, p.6.)

특히, 지금까지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장한 연구들은 북한의 권력체계와 파워 엘리트들<sup>75)</sup>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정작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실종된 연구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 가능성의 희박을 지적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많은 학자들과 주요 안보기관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 3. 북한 내부분제의 표출

#### 1) 김정일 건강 이상설

2008년 김정일 와병설 이후 미국외교협회(CFR) 및 브루킹스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다양한 미국기관에서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리처드슨은 2009년 1월 ‘The Japan Times’에서 북한의 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미국외교협회(CFR)에서는 2009년 말 ‘북한 급변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혁명 가능성은 희박하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는 리더십의 변화를 뜻하는 ‘위로부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변화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관리된 권력승계, 둘째, 경쟁적 권력승계, 셋째, 권력승계의 실패를 들었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붕괴 이후 한국군이나 미군이 북한에 진입할 경우 최대 46만 규모의 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 작성자인 폴 스테어스(Paul B. Stares)는 2008년 북한 김정일의 와병설과 관련하여 “의학적인 통계상으로 60세 이후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 25%정도는 1년 안에 사망하며, 5년 이내에 사망 할 확률은 50%를 넘는다.”면서 한번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이후에는 5년 이상을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sup>76)</sup> 북한의 붕괴 내지는 정권의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75) 권력체계의 안정성이나 취약성, 파워 엘리트들의 응집력이나 내적 갈등 등.

76) 김정일은 뇌졸중, 만성화된 후두염, 신장 질환을 앓고 있고, 길어야 3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

것임을 예시하고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1994년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20년 이상 권력수업을 거친 뒤 넘겨받았지만 현재의 후계구도는 안개 속”이라며 “북한이 불안정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불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2) 북한 경제사정 악화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1,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제1718호와 제1874호의 제재를 받고 있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 유엔안보리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므로 북한 로켓발사가 대북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6자회담에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료봉 재처리, 핵 억제력 강화, 경수로 발전소 재검토와 우주 이용 권리행사를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6월 12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무기관련 물자를 대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무기관련 물자와 연관된 금융거래, 자문과 기술을 금지했다.<sup>77)</sup>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은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를 포함한 8개 기관이며, 미국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제재리스트에는 8개 단체 외에 22개 단체와 기관의 간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0년 1월 유럽연합이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 권력 핵심인 국방

---

이 있다. (박희락, 상거서, p.69.)

77) 결의안 1718호는 수출통제 대상을 유엔 재래식 무기등록의무제도(UNRCA) 하에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형 헬기, 전함, 미사일)와 관련된 물자, 핵·미사일·생화학무기 관련 통제품목으로 제한하였으나 1874호 결의안은 모든 무기와 관련물자로 확대했다. 특히 결의안은 화물 검색 강화 조항을 담아서 무기 운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결의안 1718호는 재래식 무기가 검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선박검색에 대한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결의안 에는 포함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 멤버들을 겨냥하여 장성택을 포함한 13명을 여행금지 대상으로 정하는<sup>78)</sup>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북 경제제재가 단행되었다.

또한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에 따른 우리정부의 대북조치 여파 등으로 남북한 교역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5월 한 달간 남북교역액은 총 1억5천652만5천 달러로 전달의 1억8천998만 달러보다 17.6% 줄었다. 방북인원도 1만 188명으로 전달의 1만576명보다 3.7 % 줄었다. 방북 목적별로는 개성공단 방문이 9천503명으로 2.6%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교역사업 (-38.9%), 경험사업(-52.6%), 사회문화(-67.6%), 대북지원(-64.7%) 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줄었다.<sup>79)</sup>

그리고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화폐개혁 실패 이후 시장 통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약 300여개의 종합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현상으로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곡물유통금지(2005년 10월), 불법 시장 단속(2007년), 종합시장의 농민시장 전환추진(2008년 말) 등 통제책을 계속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은 평양을 포함한 전역에 종합시장이 널리 퍼져 있다는데 북한에서 시장은 ‘황색바람’(자본주의 문화를 지칭하는 북한말)의 진원지로 뽑힌다. 북한에서 시장은 상품을 사고파는 곳인 동시에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으로서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는 공간이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시장 확대를 묵인, 허용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0년 7월 장마철 대홍수에 전염병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북한 식량난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냉해 등으로 북한의 식량 작황이 좋지 않았다면 올 해 최저 50만 톤에서 많게는 10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sup>80)</sup>

78) 제재 대상에 오른 주요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다. 유엔안보리 1718호, 1874호 결의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산업은행, 남천강무역회사, 조선용봉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8개 기관,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봉총회사 간부 등 5명임.

79) 이 같은 남북교역액 및 방북인원의 감소는 통일부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대북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경험 전면중단, 개성공단·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일체 금지, 대북지원 중단 등의 조치 때문이다.

그리고 2002년 7월 1일 경제개선 조치를 단행하면서 말단의 공장과 기업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던 것을 지난 4월 개정된 ‘인민경제개혁법’에서 회수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허용해온 생산자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30일 개정된 ‘평양시관리법’에서도 평양시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국가적 역할을 강조했다. 원래 평양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평양시인민위원회’에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계획 위원회(48조)와 내각(52조)도 평양시에 대한 관리·감독·통제기관으로 명시된 바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통로는 차단되었으며, 미사일을 비롯한 군수물자 등의 판매로 벌어들였던 외화벌이도 정지됨으로서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3) 북한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 고조

화폐개혁 이후 북한 사회는 전반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적인 혼선으로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조치가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시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식량과 생필품 구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여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던 주민들은 회복이 쉽지 않아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 당국의 통제를 무시하기에 이르렀으며 주민들 간 서로 믿지 못하는 이반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과 3대 세습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은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책임을 외부의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는 북한 당국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초급 간부들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도부와 당에서 한순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에 의해 인식하기 이르렀다. 북한이 못살게 된 이유가 당과 수뇌부의 잘못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sup>81)</sup> 이렇듯 경제

80) 김정은, 당 대표자회가 열린 시기인 2010년 9월 말 함경북도 김책시를 시찰하면서 ‘과거에는 식량은 없어도 총탄이 없으면 안됐지만 이제는 총탄은 없어도 식량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언급.

81)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표시는 못하고 대신 김일성 주석 시대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는 식으로 간접 불만을 암시하고 있다. (조봉현, 상계서, p.36.)

난은 주민들에게 북한 수뇌부에 대한 불만을 폭증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에 대한 단속강화로 당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 되었다. 접경지역 통제나 시장의 통제강화 역시 주민과 당국 간의 대립구조를 서서히 형성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를 지탱해 왔던 선군정치 이념 또한 한국과 중국의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약화되면서 인민들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 체제는 ‘고난의 행군’(1996년~2000년) 시기에 주민 33만 명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인민들에게 먹을거리조차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써 인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장마당이 형성되고 탈북자가 늘어나는 등 불만이 극도로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일에 대한 체제 불만세력을 다독이면서 이를 새로운 체제 지지 세력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로 어린 김정은 후계구도를 조기에 구축해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4) 외부소식의 유입과 군 기강 해이

정성장은 “북한은 과거 유신독재체제의 정치억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탄압과 정보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체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북부 국경지역 일대가 남한과의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남한 드라마 CD도 집중 유통되는 등 ‘비합법적 정보 유출입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최근 탈북자의 증가로 주민들의 정보입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입수 통로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2007년 6월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남한이 전단이나 비디오 등의 외부정보를 유통시키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정보유통행위에 대한 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정보 유통행위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통제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지만 북한 주민 및 군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군부 일부에



서는 ‘적의 수장에게 경례를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정도였음이 탈북자의 증언들로 밝혀지고 있다.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군기강도 해이해져 가고 있는데, 경제사정 악화로 군대내에 식량문제 발생하여, 군은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로 군인이 민가를 약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군인들이 평양 10만호를 건설한답시고 개인집에 몰래 들어가 식량을 훔쳐가고 철근마저 뽑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인들이 농장일을 도우려고 농장에 가는데, 농민들의 재산과 집짐승 등을 도적질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하루에 먹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군 기강 해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4.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고립 심화

현재 북한은 여러 가지 문제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6자회담의 실패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을 시도하여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가 북한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sup>82)</sup>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북한은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명확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또 어떠한 반전이 있을지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09년 4, 5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유엔은 같은 해 6월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로 제재 수위를 높인<sup>83)</sup> 바 있다.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관리

82) 스티븐 보즈워즈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09년 12월 8~10일 북한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하였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그리고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미·북 양자관계의 미래비전 등을 직접 전달했다”며 “미·북 양자관계와 동북아시아 내 북한의 전반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고 언급. 따라서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친서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 체제 안전보장 등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임.

83) 유엔에서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는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북핵문제 해결여부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또한 계속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북한의 위조지폐 및 마약 등 각종 국제법 위반 사례와 대북 인권법 등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는 북한의 내적인 문제와 결합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학자 및 국가안보 연구기관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고조된다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의 긴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5.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우리의 입장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내란이나 무정부상태로 악화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주변 국가들의 합의, 북한의 협조적 태도, 국내적인 지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sup>84)</sup> 최선의 방책은 북한의 권력층 중 일부가 민족적 차원에서 한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정파가 다수의 외국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김정일 사망과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말은 북한 스스로에 의한 안정이다. 자연스러운 권력 승계가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수뇌부의 권력투쟁으로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표하였고 2009년 4,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6월 채택된 1874호에는 1718호 당시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비교적 협조적으로 참여했으며, 북한 화물검색과 금융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84) 북한에서 내란 및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이 북한지역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안정시키는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 국제 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 중의 하나는 다른 국가의 일에 대한 내정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무력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 에서도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문제를 이 헌장이 정한 해결방법에 부탁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경과한 후 일단락되면서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공산당과 군대의 위상이 워낙 공고하고,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변 국가들이 현상유지를 선호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이나 무정부상태로 악화될 경우에도 개입에 관한 의도, 명분, 능력 측면에서 유리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계속하여 북한의 후견인으로 행동해 왔고, 동맹조약에 의하여 자동개입이 보장되어 있으며, 국경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중국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군대 투입을 서방 국가들이 제대로 파악하거나 저지하는 것이 어렵고,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투입을 정당화시킬 것이며, 친중국 정권을 수립한 이후 철군할 경우 국제적으로 비난하기도 쉽지 않다.

이 외에 동북아 지역 5개국에 의한 공동개입, 유엔차원에서 집단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 등 다양한 결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한국 단독에 의한 개입이 보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의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북한의 붕괴 상황에 대하여 논해볼 수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북한에게 있어 지금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생존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지금 다양한 돌발변수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한국의 지도층과 국민들이 미리부터 의도적이면서 체계적인 위기관리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경우 김정일 사망이나 무정부상태와 같은 북한의 돌발사태가 통일로 연결되어 가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제 4 장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관리방안

### 제 1 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 1.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핵무기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핵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전쟁에서는 핵무기의 적실성이 사라질 것이며, 국가들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핵무기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핵은 사용될 수 있으며, 설사 핵무기가 사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핵사용과 재래식 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 보유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핵무기 사용 불가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혼자 핵을 보유하고 난 직후 일본에 대해 두 차례 핵무기 공격을 함으로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지만, 이것이 핵무기가 사용된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은 핵무기는 사용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설사 포클랜드 전쟁 초기에 미국이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자, 영국의 대처 수상이 “만약 미국이 영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함으로써 미국의 영국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이들은 핵무기가 정치적인 무기이진 군사적 무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핵무기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내 정치가 불안한 개도국과 후진국의 비이성적인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있다면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군사 쿠데타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들

에서 군국주의적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이웃 국가들을 강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sup>85)</sup>

북한은 선군 정치노선을 가지고 국제 NPT체제에 도전하여 핵개발을 지속했으며, 6자회담을 보이콧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핵보유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천안함 공격 등 비대칭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북핵문제로 불거진 국제적 고립과 내부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인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위기상황 극복을 목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핵무기사용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 북한의 입장

북한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협의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행된 그 어떤 국제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이며,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북한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북·미 대결이다”<sup>86)</sup>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 속에서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북·미 양자협상에 기초한 핵 협상구조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 측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서 2009년 9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핵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sup>87)</sup>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 양자협상에

---

85) Lewis A. Dunn and William H. Overholt, “The Next Phase in Nuclear Proliferation Research,” in William H. Overholt (ed.), *Asia's Nuclear Future* (Boulder : Westview Press, 1977), p.5.

86) 조선중앙통신, 『북한 외무성 성명』, 2009. 6. 13.

87) 남조선 고위당국자가 최근 미국을 행각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제안한 이른바 ‘일괄타결안’은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철두철미 조·미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남조선 당국이 미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일괄타결안’을 들고 나오면서 소동을 피우는 것은 조·미사이의 핵문제 해결에 끼어들어 방해를 놀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 집착태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간섭하는 6자회담 구도에 대한 북한당국의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둘째, 북핵문제의 해결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군축의 입장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상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와 관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백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sup>88)</sup>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상기의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핵 억제력 강화 천명(2009. 4. 14)→핵 재처리 개시(2009. 4. 25)→제2차 핵실험(2009. 5. 25)→플루토늄의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시험 성공 주장(2009. 9. 4)→폐연료봉 재처리 완료(2009. 11. 3)→북한군 차원의 공식적 핵보유국 선언(2009. 12. 23)→최고당국자(김영남)의 공식적 핵보유국 선언(2110. 2. 14) 등 일련의 가시적인 핵보유 공식화 전략을 노골적으로 진행해온 바 있다.

특히 핵보유를 공인받기 위한 북한의 핵 군축 주장에 대해서 북한 군부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서 볼 일이다. 북한 군부는 지난해 2월 2일 총참모부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핵무기를 철폐하는 유일한 방도가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sup>89)</sup>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의 6자회담 협상대표는 6자회담시 미국의 협상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에게 “미국은 인도나 파키스탄에게 했던 것처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90)</sup>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독특한 인식의 문제이다. 북한은 9. 19 공동성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철저히 검증가능하

88) 조선중앙방송,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9. 1. 13.

89) 조선중앙통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 2009. 2. 2.

90) 빅터 차, 『북한의 WMD와 동북아 지역안보』, 서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164~165.

게 실현되어야 한다. 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 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 반입되거나 통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sup>91)</sup> 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철저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판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sup>92)</sup>의 과기를 기도하고 있는 셈이고, 보다 현실적으로는 미국 억지전략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다른 아닌 한 미군사동맹의 본질적 결속지점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북미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북한 핵무기 문제이다. 설사 북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하여도 미국의 핵 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의 핵 보유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sup>93)</sup> 라고 주장하는 데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9. 19 공동성명의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대가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에는 대 미·일 관계정상화라는 정치적 유인, 에너지 지원 및 경제협력 제공의 경제적 유인,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에 의거한 한반도 비핵화원칙 재적용이라는 안보적 유인 등이 포함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넷째, 9. 19 공동성명의 실행방법론과 관련하여 먼저 북한은 ‘선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 원칙’을 표방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우리가 9. 19 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

91) 조선중앙방송,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9. 1. 13.

9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안 할 것’을 약속케 하고 있다. 여기서 접수의 개념은 함정과 비행에 의한 영해 무해통항, 기항, 기착 등기 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나,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의미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입의 개념은 함정과 비행기가 국가 영역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박희권, 『한반도의 비핵화』, 서울: 경세원, 1992, pp.127~128.)

93) 조선중앙통신,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2009. 1. 17.



제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며, 9. 19 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왜곡이다.”<sup>94)</sup> 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선 북핵문제 해결 후 관계정상화’ 입장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북한의 ‘선 평화협정체결 후 비핵화 입장’ 제시 입장의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9. 19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과 같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즉, “회담 참가국들 사이의 자주권 존중과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단계별로 조선반도를 비핵화 하는 것, 이것이 공동성명의 골자이다.”<sup>95)</sup> 라고 말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철회, 평화협정체결,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 실현 등이다. 역시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 당국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 3. 북한의 핵 협상 전략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전략<sup>96)</sup>은 이중전략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 이중전략이란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핵 대화를 제안하거나 대화에 응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핵개발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 핵외교 정책과 핵무장 정책을 철저하게 구분·병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은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010년에는 농축시설의 존재를 과시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2010년 동안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잔인무도한 도발을 저질러 놓고 2011년이 도래하자마자 태연하게 남북 대화를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이 견지해온 다목적 핵전략은 여전히 불변이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94) 조선중앙방송,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9. 1. 13.

95) 조선중앙방송,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9. 1. 13.

96) 김태우, “북핵에 대비할 능동적 억제전략”, 『월간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2011, pp.19~25.



핵무기는 일전불사의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제재간섭을 배제하는 궁극적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공중강습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며,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를 예방하는 방책이라 믿고 대포동 시리즈 미사일 개발을 통해 대륙간탄도탄(ICBM)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애쓰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을 인질로 삼는 군사적 수단으로써 미국의 대북 선택을 박탈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북한 핵무기는 ‘강성대국’의 상징이자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정치적 수단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워 ‘그 누구도 우리 공화국을 넘보지 못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궁핍에 시달리는 북한군으로 하여금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및 내부를 지향하는 북한 핵전략은 체제생존 게임의 일환으로 다분히 체제방어적인 측면들을 담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대남 핵전략은 상당한 공세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한국을 군사적·정치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최대의 공세적 수단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는 한국군의 경제적·질적 우세를 압도하는 비대칭적 군사적 수단이자 한국 정치체제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국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군사도발은 북한의 핵무기와 국지도발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재확인해 주었다.

핵무기는 우리나라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를 확산시킨다. 국민이 정부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고가 정부의 대북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대억제 수단인 핵우산은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지만 핵위협을 앞세우고 대담한 국지도발을 저지르는 핵전략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며, 이는 결국 한국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안보과제이다. 핵위협을 앞세운 국지도발 반복을 방치한다면 한국 국민의 심리적 위축은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 4. 미국의 입장

오바마 행정부의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오바마는 핵무기 확산 차단을 집권 후 추진할 5대 외교안보핵심공약 중의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집권 후 실제로 오바마는 2010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의 소위 ‘핵 없는 세상’ 연설을 통해 핵확산 금지조약을 강화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핵 비확산체제 유지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바탕에서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이 도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근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2008년 클린턴 국무장관의 미 평화연구소에서의 연설이다. 이 연설에서 클린턴은 “국제공동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미국은 지금 이를 되돌려놓기 위해 외교적인 개입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북한의 핵 야망을 차단시키는 것은 비확산 레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접촉을 가질 것이지만, 북한의 협상테이블로의 복귀는 충분한 것이 아니며 현재의 대북 제재조치들은 평양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결코 제재가 해제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클린턴의 북핵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언급에서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태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sup>97)</sup>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미 2008년 6월 2일 한·미 민간단체 공동주최의 한 세미나에서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국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sup>98)</sup>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NPT 레짐의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

97)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 의회 인준 청문회시(2008.1.13)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고농축우라늄, 핵확산 의혹을 해소 할 것이며,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미관계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월간 북한동향 09-1호, p.51.)

98) 조선일보, 『조선일보 - 미 CSIS 워싱턴 포럼 : 오바마 행정부 대북 4대원칙 발표』, 2009. 6. 4.

이다. 둘째, 6자회담 구도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셋째,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북한의 핵 폐기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제재 국면을 유도하면서도 협상에 임하는 등 대북한 핵정책에서의 이중트랙 접근책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미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말 도쿄 연설을 통해서 이러한 이중트랙 정책을 보다 명확히 했다.<sup>99)</sup> 이러한 이중 트랙정책에 의거해 미국은 한편으로는 대북 유엔 안보제재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도 지속하고 있다. 곧 북한이 핵보유 의지를 지속하는 한 대북 제재를 지속시킬 것이며, 북핵 폐기에 협력적으로 호응할 시는 적극적인 대북협력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언급은 미국이 소위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 제 2 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1. 6자 회담의 배경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선언, 1998년 8월 대포동 장거리미사일 실험,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등으로 탈냉전 이후 NPT 체제를 위협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2003년부터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다루고자 미·일·중·러·남·북한 6개국이 6자회담을 개시했다. 북한은 6자회

99) 수십 년간 북한은 핵무기 추구를 포함하여 대결과 도발의 길을 선택해 왔다. 그러한 길이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평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며, 말이나 아닌 행동을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있다. 직접적인 외교와 함께 우리의 동반국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미국은 북한에게 다른 미래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있다. 북한이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은 분명하다. 그것은 6자회담 복귀이며, 핵확산금지조약의 복귀를 포함한 약속 이행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이다.(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도쿄 산토리 홀 연설,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2009. 11. 14.)

담 공동성명,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1874호에 의한 대북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분에 불과하며 북한의 지속되는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NPT체제에 대해 가장 강한 도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북한은 문제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직접협상을 강조하면서 핵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다자회담을 주장하는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틀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방침을 견지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다자회담이나 남·북한과 미·일·중·러 6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sup>100)</sup> 관련국들 역시 북한에 다자대화를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나, 북한은 북·미 양자대화를 고집하였다.

북한 외무성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 직접협상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5+5 다자회담<sup>101)</sup>을 포함하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국제화하려는 온갖 시도를 철저히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그 어떤 형태의 다자회담에도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하나의 대안으로 북·미·중 3자회담의 틀 속에서의 북·미 양자대화라는 방식을 제시하며 북한 설득에 나서게 되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북·미 양자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북한과 직접대화를 거부하였고, 2003년 2월 파월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지도부와 북핵문제를 논의 한 뒤 3월에는 탕자쉬엔 국무위원을 만나 중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후 첸지천 중국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중·미 3자회담을 제안하고 2003년 4월 24~25일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이 3자회담은 양자회담을 고집하는 북한과 이를 거부하는 미국의 입장을 수렴한 것이며, 3자회담의 모양새 안에서 실질적으로는 양자회담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회담이 성사됨으로써 6자회담 개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sup>102)</sup>

100) 광대환,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가와 전망”, 『현대사회연구』, 서울 : 현대사회연구소, 2004, p.15.

101) 5(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 5(한국, 북한, 일본, EU, 호주)

3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필요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과감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체제안정 보장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도 핵무기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핵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3자회담은 미국과 북한간 상호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막을 내렸고, 북한의 핵 보유 시인으로 인하여 북·미 양국 간의 경직된 입장만이 확인되었다.

3자회담 이후 차후 회담의 형식에 대해서 북한은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주장하였다. 회담의 형식에 대한 이견으로 후속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북한은 다자회담 거부 태도를 바꾸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가 있다면 대화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요구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회담 개최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6자회담 개최를 동의한 이유는 첫째로 미국이 보수파의 의견을 채택하여 대북 강경책과 함께 압박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역시 관련국들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북한은 미국과 단시일 내 합의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미국이 지연 전략을 쓰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회담 주선이 촉진제 역할을 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 2. 6자회담의 진행과정

### 1) 1차 6자회담

1차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29일간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에 관하여 참가국들 간 공동 발표문 초안

---

102) 이영학, “중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 성과 및 한계 : 제2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1권 제1호』, 서울 : 연세대학교 동서연구원, 2009, pp.153~154.

작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의장이 구두로 협약내용을 요약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회의에서는 첫째,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둘째, 한반도 비핵화유지 및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셋째, 단계적, 동시 또는 병행실시 방식 추진, 넷째, 회담 진행 중 사태악화를 초래하는 행동 자제, 다섯째, 대화유지, 신뢰증진 이견축소, 공동인식 확대, 여섯째, 6자회담의 과정 지속, 외교 채널을 통한 차기회담의 시간 및 장소 조속결정 등의 내용이 발표되었다.<sup>103)</sup>

그러나 1차 회담에서는 미국이나 북한 모두 서로에게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핵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북한은 핵과 관련한 어떠한 것을 포기한다는 동의만으로도 미국이 식량이나 중유를 지원해 주어야 하며, 실제적으로 핵과 관련된 시설이나 물질을 동결하고 사찰단을 받아들일 경우 북·미 양자 간 불가침조약에 동의하고 전력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였다.<sup>104)</sup>

결국 1차 6자회담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위협이나 핵문제 등을 지속적인 대화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으나, 6자 형식의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이<sup>105)</sup> 종료됐다.

## 2) 2차 6자회담

2차 6자회담도 2004년 2월 25일~28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문제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방식과 관련하여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미 모두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는 실무그룹에서 논의하도록 약간의 양보를 하였지만, CVID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립하였다.

103) 신계륜, “6자회담 평가 및 정책제안”, 『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pp.1~15.

104) Peter Beck, 'Six-Party Talks: Agreeing to Disagree', Korea Insight(Seoul: Korea Economic Institute, 2003) Vol. no.9.

105) 이기원, “북핵문제와 6자회담”, 『월간 북한 2월호』, 서울 : 북한연구소, 2004, p.23.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핵을 분리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지만,<sup>106)</sup> 미국은 군사적, 평화적 핵을 포함하는 모든 핵에 CVID를 주장하였다. 결국 절충안으로 북한이 ‘완전한’을 ‘포괄적인’ 용어로 바꾸자고 요구하였으나 결국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다.<sup>107)</sup>

이렇게 하여 2차회담 역시 공동발표문에 합의하지는 못하고 의장성명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 둘째, 2004년 4~6월 중 3차 회담 개최, 셋째, 본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 원칙 합의, 넷째, 핵문제 및 관련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조율된 조치 등을 포함하는 선에서 종료되었다.

### 3) 3차 6자회담

3차 6자회담은 2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2004년 5월 12~15일, 6월 20~22일간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실시한 뒤 6월 23~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3차 6자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이다.

북한의 외무성 부부장인 김계관은 핵동결 및 폐기 대신 200만kw의 에너지 자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동결 및 폐기를 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중유를 제공하고, 잠정적인 다자 안전보장을 해 주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경제 제재 해제 협의 개시 등을 제시하였다.<sup>108)</sup>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북한은 유연성을 보이겠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제안은 북한이 먼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109)</sup> 3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의장성명은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106)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과 군사적 전용 억제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은 상호 모순 배치될 수 있는 속성을 상당히 내재하고 있다. 즉 핵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기술적 구분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고 평화적 목적의 군사적 목적 전용도 엄격히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엄상윤, “IAEA의 핵확산방지 역할과 한계: 북한 핵사찰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8권 제1호』, 서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7, p.131.)

107) 광태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평가와 전망”, 『정책과학연구 제14집』, 서울: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4, pp.52~58.

108) 서보혁, 『탈 냉전기 북·미 관계사』, 서울: 선인출판사, 2004, p.356.

109) 박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북핵 해결과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동국



토의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그 목표를 향해 가능한 조속히 첫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바라지 않던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을 맞게 되자,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핵보유 주장을 다시 하였고,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5년 3월 3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5월 11일에는 중앙방송을 통해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 추출을 완료했다고 보도하는 등<sup>110)</sup> 핵문제에 관한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차기 6자회담 참가 거부에 우리나라와 중국 등은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도 북한을 ‘주권국가’로 부르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등의 회담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어 2005년 7월 9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6자회담의 복귀를 약속하게 되었다.<sup>111)</sup>

#### 4) 4차 6자회담

4차 6자회담은 3차 회담 13개월 만인 2005년 7월 26일에 재개되었고, 13일간이나 열렸다. 이것은 참가국들이 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각오로 진지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한 결과였다.

여기서는 한반도 비핵화, 대북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의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문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게 되었고, 9월 13일~19일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개최되어 참가국들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마침내 만장일치로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sup>112)</sup>

9·19합의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남·북한과 주변 강국들이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 문서로 합의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이 합의로 한반도 안보상황은 대립과 갈등 국면에서 화해와 협력 쪽으로 방

---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6, p.131.

110) 김국신,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통일정세 분석』,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3.

111)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서울 : 외교통상부, 2006, pp.31~32.

112) 백승주, “1단계 4차 6자회담 평가와 2단계 회담 전망”,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 서울 : 안보전략연구원, 2005, p.2.

향이 바뀌었으며,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발판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데 합의는 했으나, 실제로 북한이 핵을 언제 폐기할 것이냐는 시점과 그 과정, 속도, 그리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의 속도와 조건, 에너지 제공문제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9·19공동성명 합의문 해석조차 북한과 미국은 차이가 있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면 즉시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수로 제공 후 핵 폐기’를 주장하였고, 미국과 기타 국가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는 ‘선 핵 폐기 후 경수로 제공논의’<sup>113)</sup> 라고 밝혔다.

게다가 얼마 뒤 북·미 관계가 크게 벌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2005년 9월 15일 미국은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 방코 델 아시아(BDA) 자금 세탁의 주요 우려 대상으로 북한을 지정하고 이 때문에 BDA는 북한에 금융거래 중단을 통보하게 되었다.

이어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등 마카오 지역의 은행과 싱가포르, 스위스 등 다른 지역 은행들이 미국을 의식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로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 5) 5차 6자회담

2006년 11월 1일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표명했으나 미국은 북한의 위폐제조,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따른 금융제재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

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관련국들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

113) 이현경, “북한의 핵전략과 북·미간 타협 : 원론적 타결과 전망”, 『한국세계지역학회 제23집 제2호』, 서울 : 세계지역연구논총, 2005, pp.229~232.

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신뢰구축을 통해 공동성명을 포괄적으로 이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모든 공약을 실천하고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에 따라 이행 과정을 개시하고 완결지으며,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이익과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결과를 성취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관련국들은 이 정신에 따라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조치 및 순서들을 만들기로 합의한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6년 12월 18~22일 5차 2단계 6자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북한이 BDA문제와 대북 적대시 조치로 규정해온 일련의 제재를 모두 해제해야 핵 폐기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휴회가 된다.

이후 2007년 2월 8~13일 5차 3단계 6자회담이 재개되었고,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인 2·13합의가 채택되었다. 2·13합의는 기본적으로 9·19공동성명을 실천하여 핵을 폐기하는 과정이 개시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

## 6) 6차 6자회담

2007년 3월 19~22일 1단계 6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은 BDA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에 2·13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합의 이행이 지연되었고, 이에 미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BDA 문제를 해결한 뒤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기로 하고, 7월 10~12일 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어 2008년 10월 말까지 불능화 작업과 에너지 지원을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핵 불능화 검증입장을 확인하였다.

이에 미국은 2008년 10월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는 듯 보였으나, 2008년 12월 8일부터 열린 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은 검증의정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담일정을 하루 연기까지 하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장기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재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현재까지의 6자회담에 대한 평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회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 핵실험은 어찌 보면 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6자회담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무용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였다.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의체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북한의 핵 강성화를 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결과만 낳았고, 이는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프리처드(Charles L. 'Jack' Prichard)가 그것을 실패한 외교로 규정한 데 대해 더욱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됐다.

6자회담은 실패한 것일까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으며,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발발 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처럼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국면을 유지하며 전환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체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6자회담의 순기능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문제를 단순화시켜 생각해 보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회담을 좌지우지하고 나머지 5개국을 거기에 끌려 다니며 6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며 나쁜 평화를 영유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가에 대한 평가는 나쁜 평화에 안주한 대가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확대된 안보불안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북한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채 핵무기 및 그것의 투발수단을 보다 강성하게 만드는 시간을 벌었으며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을 뿐 아니라, BDA에 동결됐던 자금도 반환받았다.<sup>114)</sup>

사정이 이런데도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6년간 가시적인 전쟁이

---

114) 2009년 7월 28일 콜린 파월(Colin L. Powell) 전 미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자신이 상대해 본 가장 뛰어나고 강력한 협상가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회고했다. (연합뉴스, 2009. 7. 30.)

발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6자회담이 군사적 위기 발발의 가능성을 낮췄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미사일 및 장거리 로켓발사는 명백한 군사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6자회담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을 때 과거 6자회담의 결과는 그것이 목적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상징하고 있다.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위협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간다. 과거 6자회담이 실패한 것으로 규정된다면 향후 북한과의 협상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6자회담의 실패원인을 따져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4. 주요 참여국의 명분과 입장

##### 1) 미국

미국은 탈냉전 이후 유일 패권국이 된 뒤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더욱이 NATO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개입과 확장’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의 지도력 확대를 위한 국제개입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장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시 행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며 9. 11테러 이후에는 ‘선제공격’이 군사전략으로 채택되어 외부의 위협세력을 강력하게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나 테러대응을 위해 협력안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안보에 대해 미국 중심으로 적과 친구를 구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집단안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다자주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국제적인 타협과 합의보다는 미국의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 테러와 범죄, 미국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개념에 따라 선제공격과 예방을 위한 일방적 군사전략은 유럽,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 부시 2기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치른 이후부터 북한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제5차 3단계 6자회담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sup>115)</sup>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으며, 김정일을 ‘폭군’, ‘피그미’라고 지칭해 온 부시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오바마가 집권하면서 2009년 특사와 친서의 대북외교를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과 부시의 전철을 밟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 2) 중국

중국은 미국에 대해 견제와 때로는 협조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한국 측에서 볼 때 이중적인 것으로 볼만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비판하면서 냉전체제 이후 신 국제질서는 다양성과 주권독립을 존중하는 다극화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이른바 대국외교, 화평굴기, 평화발전을 내걸었다. 특히 평화발전은 자국의 국력신장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더 적극적이고 평화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다자주의, 국제적 개입정책에 대한 주권존중과 평화, 미사일방어(MD)정책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력 정책으로 방어적인 국가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경제제재나 군사제재에는 반대하였다. 더욱이 미·일 동맹의 강화에 맞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6개국과 군사협력을 다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현상유지 측면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선호하며,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다.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원유와 식량지원 및 투자와 무역량을 늘려왔다.<sup>116)</sup>

115) 권오윤, “협력안보로서의 동북아 평화협정 체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 『평화연구 제15권 1호』,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07, p.70.

116) 북한은 원유와 식량 등 전략물자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시장에서 유통되는

미국과 국제여론에 대해서는 북핵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6자회담 구도가 5+1이 되지 않도록 의장국으로서 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빌미를 주는 등 자국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6자회담으로 유도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 체제 안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소멸보다는 어떻게든 북한의 존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지에 강경하게 나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17)</sup> 첫째,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을 바란다. 둘째,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한다. 넷째,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경제협력 구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 3) 일본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인 납치사건의 해결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여 중국, 북한의 잠재위협을 군사능력으로 압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북핵문제는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일본인 납치사건 등 자국의 국가이익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 6자회담에서 경제지원에 대하여 소극적인 결정을 하였던 이유는 국가이익에 민감한 국내정치를 의식해서 취한 조치였다.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에서 주변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차단

---

북한 주민 생활필수품의 80%가 중국산 제품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08년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70%를 상회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주도적 지위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최우길,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래 : 북한문제와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10권』,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p.121.)

117) 최우길, 상거서, pp.119~121.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국내외적 기회로 활용하여 보통국가화라는 명목 하에 군사강대국을 지향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러시아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주의, MD체제 등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미국과 일본이 ‘신안보 공동선언’으로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하자 러시아는 중국과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면서 미·일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였고, 협력안보의 형태로서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교류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핵 개발에 대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북한에 대하여 직접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국의 경제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는데, 동북아 발전을 자국의 경제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종단철도(TSR) 연결문제, 가스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연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sup>118)</sup>

### 제 3 절 우리 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 1. 현 정부의 대북정책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단기적 현안에서부터 장기적 정책목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써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

118) 권오윤, 전게서, p.78.

실현 위한 5개 중점 프로젝트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다.<sup>119)</sup>

[표 4-1] 비핵·개방·3000구상 실현 5개 중점 프로젝트

| 구분 | 분 야  | 중점 내용                                                                                                                                                                                                                                                                            |
|----|------|----------------------------------------------------------------------------------------------------------------------------------------------------------------------------------------------------------------------------------------------------------------------------------|
| 1  | 경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법률, 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파견</li> <li>-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li> <li>- 연 300만 불 이상 수출 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li> <li>- KOTRA 등 한국의 해외네트워크 활용</li> </ul> </li> </ul> |
| 2  |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만 산업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만 북한 경제, 금융, 기술 전문 인력 육성</li> <li>-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li> <li>- 북한판 KDI 및 KAIST 설립 지원</li> <li>- 북한 대학의 경제, 금융, 통상 교육과정 지원</li> </ul> </li> </ul>            |
| 3  | 재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0억 불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rld Bank 및 ADB 국제 차관</li> <li>- 남북교류협력기금</li> <li>-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li> </ul> </li> </ul>                                                                   |
| 4  | 인프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협력</li> <li>- 기간통신망 연결 및 항만, 철도, 도로 정비</li> <li>- 400km 신경의(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li> <li>- 대운하와 연계</li> </ul> </li> </ul>                                     |
| 5  | 생활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li> <li>-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지원</li> <li>-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li> <li>-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li> </ul> </li> </ul>                            |

119) 취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일 3국 대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4대 원칙을 밝혔다.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합의한 사업일지라도 ①북핵문제의 진전 ②경제성 ③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④ 국민적 합의 등 네 가지를 고려해 ‘우선할 것’과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으로 나눠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퍼주는 것이 아니라 핵 폐기의 진전속도를 포함한 모든 여건을 고려해 경험의 속도와 내용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경험과 평화비용 명목으로 1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돌아온 대가는 핵개발이었다는 현실인식의 소산이라 하였다. (동아일보 사설 및 보도, 2008. 2. 4.)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를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 북한의 개방 및 정상 국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연원은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핵심인 화해와 협력을 상생과 공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0)</sup>

## 2. 3축 체제의 구축

북한의 핵에 대비할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즉각적이고 충분한 응징과 자위권 차원의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이며, 3축 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능동적 억제전략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3축 체제는 수천기의 미사일을 공중과 지상 그리고 수중에 배치하여 보복응징 태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미사일이란 대량보복, 정밀타격, 지하시설 파괴, 도발 결정자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 유도정밀탄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무기체계를 확보함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이미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SS-Ⅲ급 잠수함 등을 투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도 큰 애로가 없다. 유도탄사령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를 증편할 필요가 없다. 요컨대, 능동적 억제전략과 3축 체제는 북한의 대남 핵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구축해야 하는 기본적인 군사대비 체계라 할 수 있다.

군비통제의 역사를 볼 때 이는 한쪽이 자신만이 가진 비대칭적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대응적 핵무장을 통해 핵문제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때

120)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조로 구성되었고 남북화해(제1장),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3장)을 명시한 문서로서 남북은 이 역사적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민족 공동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다.

요컨대 3축 체제는 북한의 핵위협을 상쇄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군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군사적 대응수단이자 우리 국민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진정성을 가진 비핵화 협상을 유도하는 데에도 일정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3축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이 남한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을 1천기 이상 실전배치하고 대륙간탄도탄까지 넘보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탄도미사일은 300km로 그리고 순항미사일의 탄두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핵전략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에게 최대의 대북 억제력은 국론결집이다.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남북대화나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모처럼 만에 이룬 우리 국민의 단합이 와해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이중적 핵전략을 직시하고 남북대화나 6자회담의 재개와 무관하게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북한의 핵전략이 강요하는 폐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

### 3. 경수로 제공

‘9. 19공동선언’에는 좀 모호한 방식으로 북한의 경수로 제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sup>121)</sup>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장의 말 그대로의 표현을 해석하면 북한은 경수로 발전을 통한 핵에너지의 이용 권리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6자회담의 여타 구성국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문제를 적절한 시기로 검토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였

12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자료』, 2005. 9. 19.

다는 것이다. 기존의 ‘제네바합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확보에 대한 의지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sup>122)</sup>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미국 측 전문가 집단에게 6자회담에서의 동결→불능화→폐기의 3단계 핵 폐기 과정을 더욱 세분화하여 동결→불능화→폐기(경수로 제공/ 플루토늄 핵 시설에 한정)→핵무기 제거(미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제거/한미동맹의 단절 조건) 등의 4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3단계의 플루토늄 시설 해체단계에서 북한은 경수로가 제공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수로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플루토늄 핵시설의 해체방안을 제시했던 셈이다. 한편,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한 이후에야 경수로 제공 논의가 가능하다.’<sup>123)</sup>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PT 복귀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등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복귀선언을 희망할 것인데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략적으로 경수로 제공은 물론 북한의 핵 폐기의 최종단계에서 NPT 복귀를 선언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만큼 북한 당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집착과 의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 4. 한·미 동맹관계의 재조명

한반도 전쟁이 정전될 때인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법적 근거로 하여 형성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안보의 근간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게 하고 민족주의와 경제성장 등 국가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하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전시대에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탈냉전 이후는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22) 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향후 약 2020년까지 총 2000만kw의 에너지 확장목표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구성 비율을 보면 수력 900만kw(25%), 원자력 600kw(32%) 등이다.

123) news VOA. com, 『힐 차관보, 북한 NPT 복귀해야 경수로 논의 가능』, 2007. 7. 13.

한국은 냉전시대부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동맹체제는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 미·일, 미·대만간의 쌍무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위 분담정책으로 국익을 확보할 수 있고, 군장비의 종속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장차 지역방위 임무도 분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미래 패권국으로 예상되는 중국에 대하여 봉쇄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124)</sup>

일본은 한·미동맹이 자국의 1차적 방위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나 군사 대국화에 제한을 준다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 이익측면에서 한·미 동맹체제에 대하여 두 가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며, 둘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가능성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국경이 맞닿은 이웃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 ‘중·러 우호협력조약’ 체결과 2004년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미국의 동맹 우선정책을 견제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의 반미활동은 미국 국민들에게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형성케 할 수 있으며, 이는 동맹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전제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를 제기한 것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유지, 참여정부의 임기를 고려한 조기 환수추진, 반미 감정예방 등의 이유<sup>125)</sup>를 들 수 있으나, 근본적인 배경은 비용절감이라

124) 김일수,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중의 협력과 갈등”,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3호』, 광주 : 한국동북아학회, 2006, p.75.

125) 최만원, “중-러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동북아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22호』, 광주 : 조선대

는 국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들도 한·미동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2006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결과인 주한미군 37,000명을 1/3규모인 12,500명 수준으로 3단계 감축계획을 추진 중인 주한 미군 재편문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지난 1990년 6월 한·미간 이전 합의서 체결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일단은 응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동맹국인 미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하여 동맹국간 호혜적 원칙이 적용되도록 돈독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5. 한·미·일 핵 자문회의

한·일 양국은 모두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 양국 내에서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어졌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을 정립하고 필요한 훈련을 해놓지 않는 한 핵우산 공약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협력조치는 서유럽식의 핵 자문회의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더해서 미 국방부가 소위 ‘지구적 태세검토’에 따라 추진 중인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과 신속적인 운용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며, 이런 현상이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는 사실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을 목표로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

학교 동북아연구소, 2006, pp.73~74.



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과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도 서유럽의 경험을 원용해서 미군의 핵전력 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국도 미국 핵무기의 표적선정 등 사용계획에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고 미국의 핵탄두를 한국의 미사일에 탑재하는 등 핵우산 구성전력에 한국군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바 있다. 2009년 8월에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서유럽의 핵계획그룹과 같은 동북아판 ‘핵전략계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고위자문관을 담당했던 예이츠와 화이튼은 지금의 동북아는 서유럽의 1960년대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하고 미국은 동맹국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핵 억지와 방어계획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동맹국들과 논의해서 전통적인 핵 억지 외에도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거부억지’ 등으로 억지의 저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의 잘못된 행동으로 중국의 공격능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가 깨닫도록 자극함으로써 중국의 대북한 압력행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서유럽식의 핵계획그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비전’에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언급한 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 핵무기에 관한 전략, 전력구조, 운용 독트린 및 표적선정 등을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극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를 의미 있게 다룰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문제와 같이 통제가 강한 사안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

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으며, 한국이 일본을 기준으로 삼아 미국에 대한 요구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각각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일 전략대화와 핵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북한 핵을 핑계로 한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일 핵전략 대화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또한 양국 내에 존재하는 핵무장 선호 여론도 달래면서 양국의 비핵정책을 살려나갈 수 있는 완충역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일본과 미국 사이에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미·일 협력이 한·미 협력에 비해 앞서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전력 운용에 대한 미·일간의 협력은 한국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소한 우리도 핵우산 공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전략 대화를 가질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한·일, 한·미 전략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를 한·미·일 3국 핵 자문회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3국 핵 자문회의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내의 핵무장 지지 여론을 무마하고 건설적으로 흡수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핵무기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동북아 평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서유럽의 경험을 고려할 때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 인근에서 중·러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책임을 한국이 공유하는 정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대국 간의

분쟁에 연루되어 부담을 지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핵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우리의 입지가 난처해질 수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러의 민감한 안보이익을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지를 발휘해야 한다.

## 6. 핵 검증체제의 구축

2008년 4월 8일의 북한의 핵 신고와 관련된 미·북간 싱가포르 합의에 의해서 그해 6월에 북한의 핵 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그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6자는 6자회담의 틀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26)</sup>

첫째, 검증체제는 6자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둘째, 검증체제 검증조치는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셋째,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 제공에 환영한다.

이러한 검증체제수립과 관련된 대강의 합의에 따라서 6자회담 구성국은 지난 2008년 12월 초(12. 8~11)에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구체적인 검증방법이 동원되는 검증의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타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등이 요구한 시료채취의 명문화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반대로 검증체제구축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게 되어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sup>127)</sup>

한편 검증체제 수립의 핵심은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장치의 완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신고내용의 정확한 사실 확인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서 신고의 완벽

126)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 자료』, 2008. 7. 12.

127)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08. 12, pp.43~44.

성을 기하기 위한 신고와 검증사이의 피드백 장치가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sup>128)</sup>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 제 4 절 미사일 방어체계와 핵우산 지원

### 1.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취약성

북한이 핵 탑재 탄도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경우 성공적인 방어를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3~7분 이내에 남한 전역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어 대응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우리나라가 구축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으로 고속의 탄도미사일들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수반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20여 개의 미사일 기지들이 산재해 있으며,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스커드-C급 이상의 미사일 1천기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 투발은 항공기로도 가능하며, 핵 투발이 가능한 항공기로는 IL-28 폭격기, MIG-21, MIG-23, MIG-29 전폭기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수전 부대 침투 등을 통해서 핵 테러를 자행할 수 있으며, 단순히 플루토늄 분말을 살포하는 방사능 살포무기로도 남한의 대도시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다. 한 마디로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sup>129)</sup>

북한이 일단 핵을 보유한 이상 다양한 핵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도 타당하다. 다시 말해, 단순한 핵 공갈을 넘어 전시적 핵사용, 전술적 핵사용, 전략적 핵사용 등의 군사전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핵 공갈은 구두나 선언 또는 고의적 정보유출 등에 의해 핵사용 위협을 전달함으로써 원하는 효과를 누리는 전략이며, 전시적 핵사용은 핵위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핵무기를 해양 또는 산

128) 함형필, “북핵 2단계 조치 분석과 전망”, 『주간국방논단 제117호』, 2007. 11, p.4.

129) 김태우·함형필, “북핵 위협 대응 한국의 안보·군사전략”, 『해군본부 주최 제13회 함상토론회』 발표문 자료, 2009. 5.

간지역에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적 핵사용은 교전상태에서 군사시설이나 군대 밀집지역을 타격하는 것이며, 전략적 핵사용이란 최후의 핵사용 전략으로 상대국의 국가기반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산업지역, 인구밀집지역 등에 핵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미사일 방어의 개념과 발전경과

순항미사일은 현재의 항공기 방어체제로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사일 방어의 핵심적 대상은 탄도미사일이다. 이것은 고체 또는 액체연료로 만들어진 로켓의 추진력에 의해 발사 및 가속된 뒤 관성유도로 비행하다가 최종단계에서는 자유 낙하하는 미사일로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초음속으로 비행한다.

탄도미사일은 관성에 의하여 유도되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받지 않고, 속도가 빠르며,<sup>130)</sup> 레이더에 나타나는 면적이 매우 작고 외기권을 비행할 경우에는 기만체와 속도가 같아서 식별이 어려우며, 고고도에서 수직으로 불규칙하게 낙하하여 탐지 및 격추가 무척 어렵다.

탄도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개발하여 런던 등의 도시를 공격하였던 V-2 미사일이 그 기원인데 독일의 기술은 전쟁 후에 미국과 소련으로 이전되었고, 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양국은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정확도가 핵전략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기술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0여개 국가 정도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이다.<sup>131)</sup>

탄도미사일이 사용됨과 동시에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대책도 발전되었다. 탄도미사일이 사용된 최근의 사례인 걸프전쟁에서도 미군은 유사한 개념 하에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을 전개하였는데 개량형 패트리어트-2에 의

130) 미사일 종류에 따라 다르나 1.5~7.2km/초로서, 대략 음속의 10배를 초과한다. (윤기철, 『전구미사일 방어』, 서울: 평단문화사, 2000, p.146.)

131) 19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Yom Kippur 전쟁),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지속된 이란·이라크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 요격도 실시하였지만 이라크의 미사일과 그 관련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작전에 더욱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다.

최근 미사일방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불량국가들이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미사일방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은 공격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하는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미사일 방어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에 대한 요격 활동을 위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사일이 전쟁에 최초로 도입된 제2차 세계대전시 영국이 취한 대응방법이나<sup>132)</sup> 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가 미사일을 사용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사일 방어는 가용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적의 미사일 기지를 발견하여 공격하는 공격작전, 요격중심의 적극방어, 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극방어로 구분한다.

### 3. 미사일 방어의 형태

#### 1) 공격작전(Attack Operation)

미사일 방어에 대한 공격작전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직·간접적인 시설은 물론이고, 미사일 발사 지휘 및 통제시설, 군수 지원시설 등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동 또는 발사준비 중인 발사대를 공격함으로써 미사일에 관한 작전능력을 저지, 무력화 및 파괴시키는 작전이다.

공격작전의 대표적인 최근 사례는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찾아 파괴하는 ‘Great Scud Hunt’ 명칭의 미군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서 미군은 이라크의 고정발사대를 찾아서 공격하는 데는 어느

---

132)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V-2 로켓발사에 대하여 영국은 ① 미사일 및 발사대에 대한 공격 ② 상대국 도시나 산업시설에 대한 보복 ③ 정치 및 군사적 중요시설, 중요산업시설의 방어 ④ 대규모 민간방위(인원의 소개, 방공호 준비, 훈련에 의한 신속한 대피) ⑤ 요격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의 맥락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이라크의 이동미사일 발사대를 찾아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공격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유무인 항공기이지만, 지대지미사일 및 특수작전부대 등도 사용될 수 있다.<sup>133)</sup>

특히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이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도 크고, 표적을 파괴하는 데 인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전략적 융통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수단들의 효과적인 기능과 협조를 위해서는 적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구비한 군사인공위성이나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비롯한 조기경보 감시수단이 필요하고, 이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공격작전에 필요한 제원을 산출하고 공격을 지시 및 통제하는 첨단 지휘통제체제가 필수적이다.

## 2) 적극방어(Active Defense)

미사일에 대한 적극방어는 현재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부분, 또는 좁은 의미의 미사일 방어에 해당된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어 표적에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무력화하여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 편의상 발사되는 미사일의 비행과정을 기준으로 부스트단계, 중간경로단계, 종말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첫 번째의 부스트단계 방어란 목표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속도를 얻기 위해 주력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의 미사일은 중력과 반대방향으로 상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미사일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타격이 용이하다. 그리고 타격 시 파편이 미사일을 발사한 나라에 떨어지고 발사체계 부분에 대한 작은 손상도 미사일의 성능 발휘에 결정적인 장애를 줄 수 있어 적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 단계의 미사일은 탐지가 어려워 대응시간이 제한되고 가용 요격수단도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다.<sup>134)</sup>

두 번째의 중간경로 방어란 부스트단계 이후부터 종말단계까지 주로 외

133) 공격작전에는 우주, 공중, 지상, 해상활동뿐만 아니라 특수부대의 활동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여러 작전들은 일반적으로 화력지원협조선을 넘어서 집중되기 때문에, 특히 공군과 상당한 수준의 합동기획이 필요하다. (김병용·엄중선, 상계서, p.81.)

134) 미국에는 로켓추진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ABL(Airborn Laser), KEI(Kinetic Energy Interceptor), SBL(Space, Based Laser) 등이 있다.



기권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활동으로서 비행경로 예측이 용이하고 가용시간이 많아 다양한 수단을 수차례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거나 미사일과 기만체를 구별하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세 번째의 종말단계는 미사일 탄두가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목표를 타격하는 단계로서 탐지나 방어의 범위가 제한되는 장점이 있다.<sup>135)</sup> 그러나 반응시간이 제한되고 타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편이나 탄두의 내용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권 진입에 따른 마찰로 탄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로 예측이 곤란하다.

적극방어의 핵심은 항공기에 대한 방어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다만, 항공기에 비해서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그 크기도 제한되며, 고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힘들다. 더구나 타격했다고 하더라도 그 잔해가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파편을 이용한 격추 기술은 그 보장도가 약하고 적 미사일의 몸통을 직격 파괴(hit-to-kill)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극방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유사하거나 더욱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통하여 대기권이나 외기권에서 비행하는 직격 파괴하는 기술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 3) 소극방어(Passive Defense)

미사일에 대한 소극방어는 적의 공격에 대한 표적제공을 억제함으로써 미사일의 공격확률을 감소시키고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전이다.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표적을 최소화하거나 숨기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방어에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 분산, 은폐와 엄폐,

---

135) 종말단계의 상층방어는 대기권 밖이나, 대기권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고, 전구고도방어(THAAD)가 있다. 하층방어는 저고도대기권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의미하고 미국의 하층방어체계는 PAC-3, MEADS 등이 있다.(김병용·엄종선, 상계서, p.82.)

모의장비 설치, 병커, 기동력 향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또한 적의 미사일 공격을 신속 및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장 정보체계가 가용해야 하고, 예상 탄도 및 피격지점을 음성이나 데이터 통신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하며, 소산 및 대피를 위한 제반 절차 및 대비태세가 강구되어야 한다.

소극방어는 비용소요가 적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기는 하지만, 그만큼 완전성은 떨어진다. 소극방어 자체가 충분한 방호를 제공할 수 없고, 중심이 짧은 국가의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 후에 경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특정한 시설이나 표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극방어책이 어느 정도 유용할 수도 있으나, 인구 중심지를 타격하려는 적 미사일의 경우에는 성과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소극방어는 보완적인 대안에 불과한 점이 있다.

#### **4.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추진방향**

##### **1)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

과거 미사일 방어에 관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도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을 추구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도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지녔고,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가 미사일을 사용하여 미군을 공격함에 따라 한국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련에 제공한 차관의 대가로 소련의 S-300(SA-10) 지대공 미사일체계를 도입하는 문제와 미국의 패트리엇을 구매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하였다는 분석이 있지만, 실제적인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미사일 방어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심은 더욱 미약하였고, 정부의 현안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한국의 인식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2009년 4월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드러나듯이 막강한 북한 미사일의 능력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 2008년부터 보수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과거의 일방적인 포용정책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시킬 수도 있고,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미사일 방어체제라는 방패를 구축해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뒷짐 지고 있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도 ‘요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초라한 모습을 보였던 한국의 미사일 방어태세가 국민과 한국군을 반성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제 미사일 방어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안보적이면서 군사적인 문제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능력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부분적이지만 미사일 방어에 노력해온 바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은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휘통제 체계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방어체계’(KAMD : Korea Air Missile Defense)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포함시켰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sup>136)</sup>

또한 2008년부터 1개 대대 규모의 발사대, 미사일, 지휘통제장비를 독일과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한국은 직격파괴 능력을 구비하지는 못하지만 사정거리가 170km 정도인 SM-2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2007년 취역시켰고, 2012년까지 2척을 추가로 전력화할 예정이다.<sup>137)</sup>

그러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한국의 현재 능력을 평가했을 때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공격작전 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적극방어를 위한 한국의 능력은 매우 미흡하다. 저속으로 비행하는 단거리 순항미사일의 임무저지 능력은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136) 조선일보, 2006. 12. 15.

137) 동아일보, 2006. 5. 25.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수도권이 북한에 근접한 상태이고 전체적인 국토의 중심이 좁은 상태에서 적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하여 한국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 많다.

### 3) 미사일 방어 추진방향

우리의 미사일 방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지리적인 여건이다. 즉, ‘거리의 폭정’(tyranny of distance)으로도 일컬어지듯이, 미사일 발사로부터 탄착지점까지의 거리이다. 이는 대응시간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거리의 폭정이 상당히 짧아서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응 가능시간이 무척 제한되고 한번 실패하면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비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미사일 방어는 최첨단의 기술과 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여 완전한 시스템을 구비하는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WMD 계획에 참가한다고 할 경우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전배치를 완료하는데 최소 1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패트리어트 25개 포대를 도입하는 데도 4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복합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경우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미사일 방어에서는 적극방어만을 중요시하지만 실제로는 공격작전이나 소극방어도 매우 현실적이다. 적극방어가 가장 확실한 대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첨단 기술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격작전이나 소극방어와의 조화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5. 동맹국의 핵우산 지원

### 1) 핵우산 제공의 개념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핵 확장억지’(unclear extended deterrence)를 쉽게 표현한 말이다. 강대국이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안보 공약을 통상 확장억지라고 하는데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의 사용까지 고려하는 경우 핵 확장 억지라고 한다.<sup>138)</sup>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의 법적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동맹국들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미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핵보유를 포기한 비 핵국가에 제공하는 소위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은 북한 등 제3국이 한국에게 핵공격을 가하는 경우 미국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격한 국가에 보복공격을 가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는 의미이다.

통상 핵우산은 동맹국 보호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비핵 국가들을 보호함으로써 독자적인 핵무장 동기를 불식시키고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아 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

핵우산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NPT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대두된 ‘적극적 안전보장(PSA)’ 개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비핵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핵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핵보유를 포기하는 NPT에 가입하거나 준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NPT체제의 안정을 원하는 핵보유국들로서는 특정 동맹국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비핵 국가들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PSA는 비핵 국가가 핵보유국으로부터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경우 유엔이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유엔은 1968년 6월 안보리 결의 255호의 채택을 통해 이를 명시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 비핵 국가들에 대한 유엔의 보호 약속은 애매할 수 밖에 없었고 핵공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 5대 핵 강국들이 비토권을 가진

138) ‘핵 확장억지’(unclear extended deterrence)와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동일한 의미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에서 보호의 실현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맹점들을 극복하고 특정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PSA가 불가피했는데, 이것이 바로 핵우산이다.

## 2) 핵우산의 효과와 문제점

핵우산은 냉전시대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의 세력팽창과 도발을 억지한 것은 물론 냉전 종식 이후에도 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1990년 걸프전쟁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에게 화학·세균무기를 연합군에게 사용할 경우 미국은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부시의 경고가 후세인의 전쟁수행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미국의 핵 보복 위협이 전쟁당사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핵우산의 효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핵우산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핵우산의 신뢰성이다. 적대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공격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핵무기로 보복할 가치와 필요성이 똑같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어야만 핵우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우산이 등장한 이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에도 미국이 과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지속되어 왔으며, 이런 의문은 소련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더욱 커졌다. 그 이유는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에 대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경우 미국 본토가 소련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뮌헨이나 영국의 런던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던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되는 경우 한반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이 서울이나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LA나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둘째,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이 초래하는 정치적·도덕적 부담감이 다. 핵우산은 적대국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선제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 미국이 1945년 일본에 두발의 핵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정치적·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군사안보전략을 채택했다. 반면에 오바마 정부는 소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핵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정책이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미국이 핵무기의 중요성을 약화시킬수록 핵우산의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인 것이다.

### 3) 미국에 의한 핵우산 지원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한국에게 가장 다급했던 국제적 대책은 당연히 핵우산의 신뢰성(credi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급한 과제는 법적 지위 향상과 보호범위 확대였다. 법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공동발표문 차원을 넘어 상위문서를 통해 핵우산을 명시하는 것이며, 보호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등 여타 종류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호보 막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화생무기는 핵문제에 가려진 상태에서 세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에게 있어서는 더 가까운 위협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우산을 강화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국제적 대책이었다.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비전에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억제(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nuclear umbrella)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었는데, 우선은 핵우산을 정상회담 문서에 명기함으로써 법



적 지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표현은 핵우산을 확대억제의 일부분으로 취급함으로써 핵무기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6·16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핵우산의 법적 지위 향상과 보호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의 성과를 거두었다.

6·16정상회담으로 확대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지금부터 추슬러야 할 후속조치들이 많다. 첫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확대억제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북한 대량살상무기 억제를 위한 정기 군사훈련, 북핵 억제용 미 군사력의 동아시아 상시 배치 등이 한미 간에 협의되어야 한다. 북핵 억제를 위한 맞춤형 훈련이나 보복 무기 체계의 동아시아 상주 등은 북한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즉각적인 핵우산 강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연합작전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협의도 필요하고, 보다 확실한 대북억제를 위해서는 핵을 통한 확대억제 방침이나 수단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핵운용에 한국이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sup>139)</sup>

그럼에도 양국이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전작권 분리 이후 채택할 양국의 작전계획서에서 핵우산 문제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화생무기와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도 확대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추후 각종 문서나 구두약속을 통해 반복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6·16정상회담이 거둔 표현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확대억제가 핵억제에만 국한된다는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확대억제’만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sup>140)</sup>

139) 일본도 작성중인 미일 공동작전계획안에 핵우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포함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일, 미에 유사시 핵사용 정보 통보 요구』, 2007. 3. 2.)

140) 미국이 핵무기 이외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해 미국이 보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전무함. 부시 대통령은 2002년 기자회견에서 “WMD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응할 것”으로 천명했음. 제2차 핵태세검토서(NPR)도 핵사용이 가능한 세 가지 상황으로 재래식 무기로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지하 목표물을 파괴해야 하는 경우, 적의 핵 및 화생무기 선제공격에 대해 보복해야 하는 경우, 불량국가란 테러단체가 예기치 않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상정

넷째, 오바마 정부의 핵 태세검토서(NPR)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핵우산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2009년 말 경에 새로운 NPR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 의회 소속 평화연구소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진이 수행한 사전연구에는 새 NPT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전략태세(America’s Strategic Posture)’라는 제하로 발간된 이 연구서는 필요한 핵 군사력의 유지, 비확산 체제관리의 강화, 핵군축 등을 강조하는 반면,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다. 2002년 부시 행정부가 발간한 제2차 NPR이 선제핵사용 포기(NFU : No First Use)정책의 폐기, 기존의 3축 체제(triad)를 강화한 신 3축 체제, 확고한 핵 우위 추구 등 일방 주의적 내용들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점을 감안한다면,<sup>141)</sup> 오바마 행정부의 NPR에서 이러한 일방 주의적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국으로서는 NPR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대한 확대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 행정부의 NPR이 제시한 신 3축 체제를 전술핵무기와 함께 첨단 재래무기들(new non-nuclear strategic capability)도 핵 보복체계에 포함시켰는데, 재래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높은 무기로서 확대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수정된다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sup>142)</sup> 대북 핵억제의 효과를 위해서는 첨단 재래무기를 핵 보복 체제에 편입시킨 제2차 NPR의 해당 부분은 오바마 정

---

했음. 그럼에도 현재는 NPR이 수정되는 과정에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이 제3의 적대국으로부터 핵 이외의 WMD 공격을 받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논란의 대상임.

141) 김태우, “미국의 신 핵정책과 아국 대응책 : 핵태세검토서(NPR)와 미국의 신 핵정책”, 『2002년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42) 이에 비해 미국이 선제 핵사용 포기정책과 선제 핵 타격 포기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대한 핵우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선제사용은 방어적 의미에서 핵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며 선제 핵 타격은 방어와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전략적 잠재력을 궤멸시키는 것을 의미함. 미국은 전통적으로 NFU를 부인하는 정책을 취해왔음. 즉 NPT에 가입했거나 상응하는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NSA를 중시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

부에서도 계속 유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NPR이 대한 핵우산 부분을 비중 있게 확실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핵 보호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 보호 차원의 PSA와 비확산관리 차원의 NSA가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게 PSA를 제공하면서 북한에게 NSA를 약속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고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다. 1994년 제네바합의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NSA를 약속하는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되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NSA를 제공해야 함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확대억제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일은 향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NATO 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에도 핵우산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조약차원의 문서로 핵우산을 명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핵우산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확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양국의 인식, 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한 양국의 목표의식 등이 달린 문제이므로 한국으로서는 조약차원의 핵우산 명시를 목표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에서 급변사태라는 위기상황 발생 시 최악의 시나리오인 핵사용 가능성과 이에 대비한 북한 핵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약소국은 국가안보를 군사적 수단보다 비군사적 수단에 더 많이 의존한다. 핵 개발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은 비군사적 수단보다 군사적 수단을 통해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 하고 있으며, 그 유용한 수단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근 반세기가 넘게 핵무기 개발에 집착해 왔으며,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은 단순한 협상용이 아닌 체제유지 차원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

과거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통한 교묘한 방법으로 주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뒤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위기고조 행위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또 한편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발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강성대국 실현과 3대 세습체제 굳히기에 있으며, 또 다른 속셈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아 핵보유국의 위치에서 미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해 보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

그동안 북핵 카드는 북한이 직면한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문제를 풀어나가고 식량난·에너지난 등 심각하게 직면한 경제난을 풀어 가는데 도움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북한은 생존과 체제보장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핵무장을 지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까지 하였고,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정치·경제·군사적인 측면이 종합되어 있으며, 공산권 몰락 이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대남 군사적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진행 될 정치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대남 및 대미 군사제재에 대한 억제용으로 사용을 위협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에너지 자원을 받으려는 협상무기로도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해 왔고 미사일과 각종 무기를 수출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내부 상황은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지난 2010년에는 군량미까지 풀어 악화된 식량난을 해결하려 했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여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안함 피폭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적인 경제지원이 단절되면서 인민경제는 최악의 상태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고립에서 벗어나 대화의 물꼬를 터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내부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국제적인 제재조치와 시장억제 실패로 인한 경제난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후계자 김정은이 공개 등장하며 3대 세습을 가시화 하면서 체제유지 차원의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은 72년부터 98년까지 김일성으로부터 25년간 후계자 과정을 거치면서 권력을 이어받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30대도 안된 약관의 김정은이 순탄한 권력승계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3대 세습체제 구축이 북한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내적으로 김정은 우상화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사상검열과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김정일이 수차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대를 이은 권력승계를 보장받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김정은으로의 세습과정은 아직도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

3대 세습체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북한의 국내정치가 혼란

으로 점철될 경우 북한의 불안정은 체제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더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그동안 건강설이 나돌았던 김정일이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망이 임박하거나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심각한 경제난 심화와 주민통제 강화에 반발하여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이라는 중동바람과 다변화하는 국제정세 변화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급변사태라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체제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등극한 김정은이 치적을 위한 첫 포성으로 ‘핵 억지력 강화’를 내세우고 자국의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주장한 바와 같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최악의 북한 핵 시나리오인 핵을 이용하여 위기를 타개하려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고 비핵정책을 견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북한이 처한 현실과 변함없는 대남 강경기조로 볼 때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 이해 관계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 핵문제의 실마리를 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6자 회담이나 남북한이 직접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둘째, 북한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협상전략을 분석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도 대북정책을 기조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서로 타협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추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압력만 가한다면 북한의 반발을 유발하여 더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협력에 대한 압력과 협력에 대한 보상을 연계하여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더욱 협력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악의 북핵 시나리오인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하여 우리 자체적인 노력의 일환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동맹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또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과는 북핵 및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한 군사협력방안 구축이 필요하며, 일·중·러시아 등과도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위기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핵문제가 가지는 엄중함을 이용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 회생 노력에 착안하여 포용안을 제시함으로서 포괄적인 타협을 이룬다면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의 영향으로 장기 집권 중이던 이집트가 무너지고, 리비아에서도 반군에 의해 카다피 정권이 종말을 맞이하는 정세변화를 보면서 지구상에 국민의 지지 없는 영원한 독재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북한에서 인위적으로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려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도 재스민 혁명의 파급효과와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에 무관할 수는 없으며, 국제적 고립과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난은 북한을 급변사태라는 변화의 소용돌이로 이끌 수 있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돼 있다. 또한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현재 진행 중인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체제안정이라는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체제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1, 2차 북핵 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핵 개발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은 핵을 비군사적 수단보다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해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대남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고, 핵을 이용한 대남 및 대미 군사제재의 억제용으로 위협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의 핵 시설과 규모, 현재 개발 완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북한의 핵 이용 전략을 심층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 핵문제의 최종 목표인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지금까지 생산한 핵들을 완전 폐기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북한 핵 문제 및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맹관계의 재조명이 필요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인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요망된다.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난과 후계체제 구축 등 내부적인 실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공개된 선행 연구 자료와 간행물에 의존해야만 하는 제한으로 검증에 자료의 부족이 있었다. 향후 대북 전문가나 귀순자 진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실상을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연구자료가 부족하였고, 미공개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연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 심층 깊은 연구가 제한되었다. 향후 북한이 급변사태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한다면 과연 최악의 시나리오인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초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6자 회담이 6차 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된 지 3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본다. 현재도 북한을 6자 회담의 틀로 끌어들여 관련국들 간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회담의 목적을 달성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따라서 6자 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면밀한 전략적 대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핵우산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추진 방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1) 단 행 본

- 국방부(2010), 『2010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 동승용 외(2011), 『월간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 박헌옥 외(2011), 『군사논단』, 서울 : 한국사회학.
- 박희권(1992), 『한반도의 비핵화』, 서울 : 경세원.
- 변상정 외(2010), 『군사논단』, 서울 : 한국사학회.
- 서보혁(2004), 『탈냉전기 북·미 관계사』, 서울 : 선인출판사
- 육군대학(2011), 『군사논평』, 대전 : 육군대학.
- 윤기철(2000), 『전구 미사일 방어』, 서울 : 평단문화사.
- 이수석 외(2010), 『월간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 외교통상부(2006), 『외교백서』, 서울 : 외교통상부.
- 조홍제(2007), 『미사일 방어와 한국의 선택』, 서울 : 한누리미디어.

### 2) 연구논문

- 고유환(2010),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논리와 징후”,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 53호』, 서울 : 통일문제연구소.
- 권오윤(2007), “협력안보로서의 평화협정 체제를 만들기 위한조건들”, 『평화문제연구 제15권 1호』,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 곽태환(2004),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현대사회연구』, 서울 : 현대사회연구소.
- \_\_\_\_\_(2004),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 평가와 전망”, 『정책과학연구 제14집』, 서울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길병옥(2007),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전략과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

- 『한국동북아논총 제12권 제4호』, 서울 : 서울동북아학회.
- 김국신 외(2006),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통일정세분석』, 서울 : 통일연구원.
- 김군식(200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대외정책연구원 세미나 토론 발제문』, 서울 : 대외정책연구원.
- 김수민(2008),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세계평화통일학회 평화연구 제8권 3호』, 서울 : 통일문제연구소.
- 김연수(2010),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전략”, 『국제문제연구 제10권 제1호』,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김정남(2009), “북핵문제에 대한 한반도 주변 4강의 대응 연구”,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무(2011),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목표 : 대북정책 원칙 견지와 북한에 대한 전략적 관리 필요”, 『월간북한 2월호』, 서울 : 북한연구소.
- 김일수(2006),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중의 협력과 갈등”, 『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3호』, 광주 : 한국동북아학회.
- 김정봉(2010),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구축 동향과 전망”, 『자유민주연구 제5권 제1호』, 서울 : 자유민주연구학회.
- 김병용·엄종선(2005),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특징과 우리의 방향”, 『국방정책 연구 제69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김용현(2009), “북한문제와 한·중 협력”, 『한국동북아논총 제50집』, 서울 : 한국동북아학회.
- 김태우(2002), “미국의 신핵정책과 아국 대응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대.
- \_\_\_\_\_(2009), “미국의 핵태세검토서와 미국의 신핵정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대.
- \_\_\_\_\_(2009), “핵위협과 핵우산”, 『신아시아 제16권 제13호』, 서울 : 신아시아연구소.
- \_\_\_\_\_(2010), “북핵에 대비할 능동적 억제전략”, 『월간 북한 3월호, 통권 471호』, 서울 : 북한문제연구소.

- 남창희·이종성(2010),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 패턴과 전망”, 『국가전략 통권 제52호』, 서울 : 세종연구소.
- 문순보(2010), “한·일·중 정상회담 평가와 6자회담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비핵화와 차별된 6자회담 필요”, 『월간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 박헌옥(2010), “김정은 세습체제의 군사정책 전망”, 『군사논단 통권 제64호』, 서울 : 한국군사학회.
- \_\_\_\_\_(2011), “북한, 강성대국 건설론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군사논단 통권 제76호』, 서울 : 한국사학회.
- 박성화(20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 북핵 해결과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동국대학교.
- 박상유(2010), “북한의 3대 권력세습 조기 시행 배경과 전망”, 『군사평론 제410호』, 대전 : 육군대학.
- 박계향(2010), “김정은 치적위해 제3차 핵실험 시도할 수도”, 『군사세계』, 서울 : 21세기연구소.
- 박휘락(2009), “북한 미사일 개발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군사평론 제400호』, 서울 : 세종연구소.
- \_\_\_\_\_(2010),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국가전략 제16권 제4호』, 성남 : 세종연구소.
- 백승주(2005), “1단계 4차 6자회담 평가와 2단계 회담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서울 : 안보전략연구센터.
- 변상정(2010), “북한의 제3차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전략”, 『군사논단 통권 제 64호』, 서울 : 한국군사학회.
- \_\_\_\_\_(2010),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추진 동향과 전망”, 『군사논단』, 서울 : 한국군사학회.
- 서재진(2008), “비핵·개방·3000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정책과제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서울 : 대외정책연구원.
- 석원화(2009), “포스트 북핵시대 북핵문제의 전망과 과제”,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엄상윤(2010), “IAEA의 핵확산 방지 역할과 한계 : 북한 핵사찰 사례를

-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8권 제1호』, 서울 : 세계평화학회.
- 오경섭 외(2011), “2011년 북한 정세 전망”, 『월간 북한 1월호 통권 469호』, 서울 : 북한연구소.
- 이동복(2010), “북한 권력세습과 한반도 안보”, 『월간 북한 12월호 통권 468호』, 서울 : 북한연구소.
- 이기원(2004),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월간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 이영학(2009), “중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 성과 및 한계 : 제2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1권』, 서울 : 연세대 동서연구원.
- 이수석 외(2010), “2010년 북한, 무엇을 남겼나 : 김정은 등장과 선군정치 강화”, 『월간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 \_\_\_\_\_(2011), “북은 왜 핵회담을 제의 했나 : 6자회담 성사 가늠할 주요 변수들”, 『월간 북한 6월호 통권474호』, 서울 : 북한연구소.
- 이현경(2009), “북한의 위기고조 행위와 미국의 대응”, 『평화연구 제17권 제410호』, 서울 : 고려대학교.
- 이장근(2009), “핵비확산조약(NTP)의 의미와 2010년 NTP평가회의”, 『국제 지역정보 165호』,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_\_\_\_\_(2005), “북한의 핵전략과 북미간 타협 : 원론적 타결과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제2호』, 서울 : 세계지역연구논총.
- 윤규식(2010), “김정은 후계체제와 북한의 군사위협”, 『군사논단 통권 제67호』, 서울 : 한국군사학회.
- 유석렬(2010), “6자회담 재개와 2010년 남북한 관계 전망”, 『외교부 외교 제92호』, 서울 : 외교통상부.
- 윤영오(2009), “이명박 정부 출범과 남북한 관계”, 『한국동북아논총 제14권 제4호』, 서울 : 한국동북아학회.
- 전성훈(2010),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 정책”, 『국가 전략 제16권 제1호』, 서울 : 세종연구소.
- \_\_\_\_\_(2011),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의도와 대응방안”, 『월간 북한 1월호 통권 469호』, 서울 : 북한문제연구.
- \_\_\_\_\_(1992),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비핵화 전망”, 『민족통일연구

- 제5회 학술회의』,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전정환(2010), “북한 권력승계의 희비극”, 『월간 북한 11월호』, 서울 : 세계지역연구논총.
- 정태욱(2007),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위하여”, 『민주법학 제33호』, 서울 : 관악사.
- 정운중(2010), “핵개발 욕심 못버리는 북한”, 『월간 북한 12월호 통권 468호』, 서울 : 북한연구소.
- 조동호(200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대외정책연구 원 세미나 토론 발제문』, 서울 : 대외정책연구원.
- 조봉현(2010), “북한의 경제상황과 사회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최만원(2006), “중·러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동북아연구 제21권 제1호』, 서울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최우길(2010),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래 : 북한문제와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제10권 2호』,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한용섭(2010), “핵무기 없는 세계 : 이상과 현실”, 『국제정치논총 제50집 제2호』, 서울 : 한국국제정치.
- 함형필(2007), “북핵 2단계조치 분석과 전망”, 『주간 국방논단 제1177호』, 서울 : 주간국방논단.
- 홍성후(2010),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한국동북아학회 제55집 15권 제2호』, 서울 : 한국동북아논총.



# ABSTRACT

## Research on the countermeasures for North Korea's nuclear issue

Yeum, Kyu Hyun

Major in Military Strateg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NK is looking to gain its standing as a nuclear weapon state like Indonesia and Pakistan through nuclear development. And as a mean to break through the overall crisis it is facing today, NK can possibly develop and use nuclear weapon.

For the past half a century, NK has been persistent in nuclear development to achieve its goal of being nuclear-have. In current situations, NK does not easily seem to give up on its nuclear, and it has become more obvious that NK is trying to develop nuclear not just for talks but to sustain the regime.

In the past, NK had seek benefits from the US by using its nuclear as a measure to making surrounding situations complex and gradually heightening the tension. However, the essence of NK's efforts to become nuclear weapon state is to receive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standing as the equal level of bargaining power as the U.S so that they acquire more benefit from an international aid.

Eventually, through these efforts NK will try to become a prospering big power and stabilize it's three generations' hereditary regime.

NK's economical hardship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and failures in market control is deepening. Furthermore, if establishment of NK's hereditary regime over three-generations takes an unfavorable turn, there is a chance of facing the worst possible scenario: regime crisis.

Kim-Jong-Il, who's health had been the subject of rumors lately,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open campaigns to reinforce the regime solidarity. Under the situation where Kim might face an immediate death or actualization of such a possibility exists, we cannot ignore the potential of NK's regime being threatened by spreading effects of Middle East's dust storms like revolution in Jasmine and diversifications of international situations.

While we cannot exclude the potential of NK to have additional nuclear tests for alleviations of their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they may become forced to utilize their nuclear in their worst case nuclear scenario.

As of now, SK is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achieve both the denuclearization of NK and reinforcements in national security.

The resolve of NK's nuclear issue by ourselves alone is difficult. Considering the actuals NK's at and their invariable resolute policy against SK, any progressions on the current matter is challenging without the help of concerned neighbouring nations such as U.S and China.

Thus, to put an end NK's nuclear issue and promote stabil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responding practices are in need:

First of all, clue to the problem should be found in the six-way talks or direct negotiations between SK and NK, which is a starting point

for resolution of NK's nuclear.

Secondly, flexible response strategy is needed achieved by analysis of NK's negotiation strategy based on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s NK. Joint efforts are crucial where support is provided when it is possible, while compromise is made in other possibilities.

Third, pressure alone will only cause oppositions from NK and aggravate the situation. So SK needs to induce NK to accept their cooperation by connecting pressure for incooperation and compensation for cooperation.

Fourth, a plan to construct missile defense system and receive nuclear umbrellas of allies must be devised for NK's actual use of nuclear power in worst case scenario.

Fifth, building a close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S, our closest ally, is required to prepare detailed and concrete response practices for NK's nuclear emergent state. Also, multi-cooperating practices with Japan, China and Russia must be studied as well.

Sixth, SK government should put efforts to capture opportunities while managing NK's nuclear threats simultaneously. By stating the severeness the nuclear issue has to oppress NK and providing tolerant proposal to aid NK's economic resuscitation, SK should struggle to include NK within the international society.